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025. 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목 차

I. 개 황

1. 감사의 목적	1
2. 감사기간	1
3. 감사실시 대상기관	2
4. 감사반의 편성	3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4

II. 주요 감사실시내용

1. 농림축산식품부	7
2. 농촌진흥청	22
3. 산림청	25
4. 한국마사회	30
5. 한국농어촌공사	32
6.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35
7. 축산물품질평가원	38
8.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39
9.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40
10. 농업정책보험금융원	41
11. 국제식물검역인증원	42
12.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43
13. 한식진흥원	44
14.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45
15. 축산환경관리원	46

16. 한국농업기술진흥원	47
17. 한국임업진흥원	48
18. 한국산림복지진흥원	49
19.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50
20.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51
21. 한국치산기술협회	52
2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53
23. 산림조합중앙회	60
24. 해양수산부	61
25. 해양경찰청	76
26. 부산항만공사	80
27. 인천항만공사	81
28. 여수광양항만공사	82
29. 울산항만공사	83
30. 해양환경공단	84
31.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85
32. 한국수산자원공단	86
33.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87
34. 한국해양수산연수원	88
35. 한국해양진흥공사	89
36. 한국해양과학기술원	90
37. 한국어촌어항공단	91
38. 국립해양생물자원관	92
39. 국립해양박물관	93
40. 국립해양과학관	94
41. 한국항로표지기술원	95
42. 한국해양조사협회	96
43.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97

44. 한국선급	101
----------------	-----

Ⅲ.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농림축산식품부	103
2. 농촌진흥청	118
3. 산림청	121
4. 한국마사회	126
5. 한국농어촌공사	128
6.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131
7. 축산물품질평가원	134
8.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135
9.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136
10. 농업정책보험금융원	137
11. 국제식물검역인증원	138
12.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139
13. 한식진흥원	140
14.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141
15. 축산환경관리원	142
16. 한국농업기술진흥원	143
17. 한국임업진흥원	144
18. 한국산림복지진흥원	145
19.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146
20.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147
21. 한국치산기술협회	148
2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149
23. 산림조합중앙회	156
24. 해양수산부	157
25. 해양경찰청	167

26. 부산항만공사	172
27. 인천항만공사	173
28. 여수광양항만공사	174
29. 울산항만공사	175
30. 해양환경공단	176
31.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77
32. 한국수산자원공단	178
33.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179
34.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80
35. 한국해양진흥공사	181
36.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82
37. 한국어촌어항공단	183
38. 국립해양생물자원관	184
39. 국립해양박물관	185
40. 국립해양과학관	186
41. 한국항로표지기술원	187
42. 한국해양조사협회	188
43.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189
44. 한국선급	194

IV. 일반증인 및 참고인

1. 기관별 증인	195
2. 기관별 참고인	198
3. 증인 · 참고인 주요 신문요지	201

I . 개 황

1. 감사의 목적

『대한민국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분야의 국정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법률안 등 안전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을 목적으로 함.

2. 감사기간

- 2024. 10. 7.(월) ~ 10. 25.(금)

3. 감사실시 대상기관

위원회선정 대상기관 (국감조사법 제7조제1호 내지 제3호)	[국감조사법 제7조제3호에 직접 명시된 기관]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2개 기관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 ○ 농촌진흥청 ○ 산림청 ○ 해양경찰청 등 5개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한국마사회 ○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축산물품질평가원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국제식품검역인증원 ○ 농림수산물품질교육문화정보원 ○ 한식진흥원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 축산환경관리원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한국임업진흥원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 한국치산기술협회 ○ 부산항만공사 ○ 인천항만공사 ○ 여수광양항만공사 ○ 울산항만공사 ○ 해양환경공단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한국수산자원공단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한국해양진흥공사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한국어촌어항공단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 국립해양박물관 ○ 국립해양과학관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 한국해양조사협회 등 35개 기관	본회의승인 대상기관 (국감조사법 제7조제4호)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 ○ 농협경제지주회사 ○ 농협금융지주회사 ○ 농협은행 ○ 농협생명보험 ○ 농협손해보험 ○ NH투자증권 ○ 산림조합중앙회 ○ 수협은행 ○ 한국선급 등 9개 기관

4. 감사반의 편성

감사위원	◇ 위원장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위 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문금주, 문대림, 서삼석, 송옥주, 윤준병, 이병진, 임미애, 임호선, 주철현 (국 민 의 힘) 정희용, 김선교, 박덕흠, 서천호, 이만희, 이양수, 조경태 (진 보 당) 전종덕	
사무보조자	◇ 위원회 직원(19인) -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 전문위원 최선영 - 전문위원 임재금 - 행정실장 김병진 - 농림정책조사관 김현숙 - 농림정책조사관 김미숙 - 해양수산조사관 이구형 - 농림정책조사관 김소연 - 농림정책조사관 박정현 - 해양수산조사관 김현자 - 해양수산조사관 김준기 - 농림정책조사관 사승희 - 농림정책조사관 정민규 - 농림정책조사관 임주형 - 해양수산조사관 이길형 - 행정관 허성환 - 주무관 박경덕 - " 채정현 - " 황서영	◇ 위원보좌진(19인) ◇ 정책연구위원(3인) - 이호중(더불어민주당) - 김태호(국민의힘) - 장두희(국민의힘) ◇ 속기주무관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 시		감 사 대 상 기 관	감사 장소	비 고
10.7(월)	10:00	농림축산식품부	국 회	【소속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한국농수산대학, 국립종자원
10.8(화)	10:00	해양수산부	국 회	【소속기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해양조사원, 동해·서해·남해어업관리단, 지방해양수산청(부산·인천· 여수·마산·울산·동해·군산· 목포·포항·평택·대산),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부산·인천해사고등학교
10.9(수)	한글날			
10.10(목)	국정감사 자료정리			
10.11(금)	14:00	농촌진흥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축산환경관리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국 회	【소속기관】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일 시		감 사 대 상 기 관	감사 장소	비 고
10.14(월)	10:00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협은행 포함)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어촌어항공단	국 회	
10.15(화)	국정감사 자료정리			
10.16(수)	10:00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치산기술협회	정 부 대전청사	【소속기관】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산림교육원, 산림항공본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지방산림청(북·동·남·중·서)
10.17(목)	국정감사 자료정리			
10.18(금)	10:00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NH투자증권 포함)	국 회	

일 시		감 사 대 상 기 관	감사 장소	비 고
10.21(월)	11:00	해양경찰청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과학관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선급	해양경찰 교육원	【소속기관】 해양경찰교육원, 해양경찰정비창,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지방해양경찰청 (중부·서해·남해·동해·제주)
10.22(화)	10:00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마사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 한식진흥원	국 회	
10.23(수)	국정감사 자료정리			
10.24(목)	10:00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	국 회	
10.25(금)	10:00	해양수산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	국 회	

Ⅱ. 주요 감사실시내용

1. 농림축산식품부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기획일반	○ 공무국외출장 감사원 감사를 통해 부실보고서 파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장애인 의무고용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 필요 ○ 농식품부 농업 관련 국가사무가 2000년부터 지방으로 79개가 이양됨에 따라 지자체 농업직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국가정보원이 추진 중인 공공기관 망분리 정책에 따른 논리적 망분리와 다층보안체계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 대책 마련 필요
국제협력	○ TRQ 및 할당관세 운영과 관련하여 소고기 관세지원액 88%를 수입유통업자가 독식하는 등 정책효과가 낮게 나타났으므로, 이에 대한 농업분야 영향분석 및 사후 관리 강화 필요 ○ TRQ 및 할당관세 적용을 통한 수입 농산물 확대는 농산물 가격 폭락 및 국내 생산기반 악화로 이어져 국민 먹거리에 대한 수입의존성을 강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 ○ 농산물 관련 TRQ, 할당관세 제도의 신중한 운영 및 관련 자료 제출 필요 ○ TRQ 물량 결정 심사과정의 부실에 대한 감사원 감사 필요 ○ 농산물 관련 TRQ, 할당관세 제도에 대해 기재부 서류 제출을 성실히 이행할 필요 ○ ODA 사업예산이 매년 대폭 증가하고 있으므로, 집행 과정에서 보다 책임감 있는 관리·감독 필요

농촌정책	○ 지역농림어업협력법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 필요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대상 연령 확대 검토 필요 ○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여성 농민에 한정하여 실시하고 있는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개선 필요 ○ 한시 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의 상시조직으로의 전환 방안 검토 필요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활성화를 위해 조성목표액 설정기간 연장, 법인세 혜택 상향, 기부금품법 예외 적용 제도정비를 위한 노력 필요 ○ 농촌지역 무등록 숙박시설에서의 사고 예방을 위해 미신고 숙박업 실태 점검 필요 ○ 농업인행복버스 사업이 농촌왕진버스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수혜 지역이 축소된 바,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식품사막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지원 필요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요건 완화 필요 ○ 농촌지역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의 신속한 지정 필요
농업정책	○ 벼멸구, 배, 레드향, 단호박 등의 열과 피해 등 이상 기후로 인한 재해 피해에 대한 보상 인정 및 보장 범위 확대 등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 농작물재해보험 할증·할인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 ○ 손해사정 관련 조사 방식 개선, 손해사정을 보험사업자로부터 분리, 손해평가 서비스 개선, 손해평가 적정인력 운영 방안 마련 등 손해평가 관련 제도 개선 필요 ○ 소득안전망 재해안전망 구축을 정책 보험에 기대는 것에 대해서는 제고 필요. 기본 안전망으로 농산물 가격 안정제를 주축으로 선택 안전망으로 수입안정

	보험 추진 필요, 수입안정보험은 수확량 검증 시스템 미도입 등 준비 미흡으로 현장 소통 등을 통해 제도를 잘 설계하여 추진 필요 ○ 농업경영의 불확실성 극복을 위해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확충의 일환으로 수입안정보험의 안정적 추진·정착 필요, 무기질 비료, 농사용 전기 등 주요 농업용 기자재 및 에너지 지원 지속·확대 필요 ○ 식량안보 위기 속 농지 면적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 관련, 농지보전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고 농지를 영농형 태양광에 활용할 수 있는 대책 마련, 농지법 위반에 대한 단속 철저 등 대책 마련 필요 ○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 완화, 친환경농업을 위한 농지 임대 허용, 농지진흥구역 내 농자재 판매시설 설치 허용 등 농지 취득 및 이용을 원활하게 하는 방향으로 농지 관련 규제 개선을 통해 농지거래 활성화 필요 ○ 농지법에서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않고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산지를 농지로 인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농업인 불이익 방지 대책 검토 필요 ○ 외국인 소유 농지의 농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 필요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를 지원하는 당초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 ○ 공익직불제 기본계획 수립 시 농외소득 제한 기준 현실화 필요, 공익직불금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필요 ○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방지, 특히 임차농의 문제와 관련한 대책 필요, 부정수급 단속 인력 확충 및 조사 방식 개선 필요 등
--	---

	○ 한우 폐사 시 가축재해보험 보상 기준 현실화 필요 ○ 정부의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 검토 시 농업계 의견이 반영되도록 산업부와 적극적인 협의 필요,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농사용 전기사용자의 자가용 태양광에 REC 가중치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 검토 필요 ○ 농사용 전기요금 관련 부처 논의 시 현실적 대안인 원자력발전의 필요성 적극 피력 필요 ○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으로 인한 지역농협의 부담 경감, 유희시간 활용 방안, 보험 문제, 법무부 사증 발급 인원 보장 요청 등 제도 개선 검토 필요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장기 체류 비자 발급 검토 등 농업분야 외국인력 공급 부족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 필요 ○ 농업 종사자 임금체불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 ○ 농정의 변화 등에 대한 정책 홍보 시 기존의 행정 조직이나 농정 관련 단체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 ○ 폭염으로 인한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필요 ○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기간 연장, 청년농 멘토링 사업을 영농의무교육 이수시간에 포함하는 등 사업의 개선 검토 필요 ○ 청년농 창업 유형을 세분화하여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 고령농 영농기반의 통합승계 지원, 창업 외 농업 취업 지원 정책 마련, 농진청과 청년농 육성체계 조정 등 청년농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필요
--	---

	○ 일반 국민의 농업이해도 제고를 위해 미래세대와 교사 등에 대한 교양 농업교육 확대 필요 ○ FTA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지원사업 확대, 직불금 지원 연장 검토 등 대책 마련 필요 ○ 지역농협 비조합원 사업이용량 규제 완화 필요 ○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필요 ○ 부모 승계농업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 시 공제 기준 금액 상향 검토 필요 ○ 농지 매도를 통해 은퇴하는 고령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농지이양은퇴직불제는 지급연령 등 현실을 고려해 사업의 개선 검토 필요 ○ 농업생산비 폭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필수농자재 지원 예산 마련 필요 ○ 섬에 거주하는 농업인에 대한 특화된 사업이나 지원 방안 마련 검토 필요
농식품혁신정책	○ 미래 농업기술 혁신과 생산농업의 경쟁력 확보 계획을 마련할 필요 ○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중앙정부와 시·도의 계획을 연계 수립하고, 업계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민-관 협의체 운영 및 스마트농업 전문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지원 필요 ○ 기후변화, 노동력 부족 등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 농기계 연구개발 지원 필요 ○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임대형 스마트팜은 시공 경험이 없는 업체 선정, 습지 위 조성 등으로 하자가 다수 발생 하였으므로, 농식품부 차원의 면밀한 조사 및 감사 필요 ○ 제주도에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향후 예산 편성 필요

	○ 친환경농업 인증 관련 해외(EU, 영국, 일본, 미국 등) 친환경인증 취소사례와, 이를 바탕으로 한 인증제도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선진국 대비 산업생태계는 뒤처지고 있으므로, 스마트 농업 산업생태계 육성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마련 필요 ○ 선진국과 벌어지는 농업과학기술 격차 감소를 위한 세부 방안 마련 필요 ○ 농진청을 비롯한 농식품부 소속산하기관 전체의 내년도 R&D 예산 내역을 파악하고, 미래 투자인 농업분야 R&D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해 장기적으로 종자관련 연구 비중 확대 및 과제 다양화 필요 ○ 친환경인증 농산물의 현장 단속 등을 위한 구체적인 인력증원 계획 마련 필요 ○ 친환경인증 허위 과대 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 논리 개발 및 제도적 개선 필요 ○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의 주요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다음 계획 수립 시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목표 설정 필요 ○ 친환경농업 활성화 대책 및 친환경인증면적 및 가구수 축소에 대한 대안 마련 필요 ○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과 청년농 육성 사업의 연계가 필요한바, 청년농에 대한 교육 확대 필요 ○ 무기질 비료 지원 사업 관련 예산 반영 필요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므로, 국비 지원 검토 필요
--	---

	○ 발농업 기계화율 제고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 필요 ○ 농기계 직거래 시 정보가 남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농기계 신고제의 효율적 운영 필요 ○ 불법 농약 유통의 상당수가 온라인 판매를 통하여 발생하고 있으므로, 불법 농약의 무분별한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 강화 및 조속한 대책 마련 필요 ○ 수확기에 빈번하게 농기계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2024년 10월 현재 2023년 통계가 나오지 않았을 정도로 관리, 운영이 미흡하므로, 개선 필요 ○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대하여 스마트팜 리모델링 공모사업 등의 형태로 국비 지원 근거 마련 필요
식품산업정책	○ 대한민국 김치품평회의 원산지 위반 업체에 대해 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 필요 ○ 제주 지역에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를 조성하여 그린바이오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할 필요 ○ 가공식품 위주의 식품 수출실적 홍보에 그치지 않고 신선 농산물 수출 경쟁력을 높일 필요 ○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한식진흥원 홈페이지에 한식 표기법 및 조리법 오류 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시정 필요 ○ 한식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 수립 업무의 외주화를 지양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필요 ○ 중국이 돌솥비빔밥을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하여 농식품부의 적극적 대응 필요 ○ 국가식품클러스터내에 식품테마파크(푸드파크)를 조성하여 K-푸드 발전에 기여할 필요 ○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연구소를 유치하여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기능의 확대 검토 필요

	○ 매년 수 십 조 원의 농축수산물식품 무역적자에도 불구하고, 수출실적 홍보에만 매달리는 행태 개선 및 수입 농축수산물식품 등에 따른 농민 피해 보전대책 마련 필요
방역정책	○ 동물용의약품 불법유통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 필요 ○ 축산농가들이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유인책 마련 필요 ○ 가축방역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가축방역관 및 공중방역수의사 처우개선 대책 마련 필요 ○ 수의직 공무원 공석 문제 관련 대책 마련 필요 ○ 가축방역 관련 전문가 및 대국민 홍보 강화 필요 ○ 가축전염병 관련 정책 홍보의 특정 지역 편중 문제 개선 필요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인간 전파 관련 대책 마련 필요 ○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일시이동중지명령시 가축분뇨 부속도 검사기간 연장 검토 필요 ○ 살인진드기(SFTS) 인체용 치료제 개발 및 방역 홍보를 위한 노력 필요 ○ 겨울철 오리사육제한의 이유, 시행기간 및 계열화사업자의 피해 지원대책 검토 필요 ○ 가축전염병 관련 타 부처와의 업무협의 확대 및 담당자 직위 격상 필요 ○ ASF 등 질병발생 농가의 경우에도 경감기준을 적용하여 가축평가액의 100%까지 살처분 보상금 지급 필요 ○ 5년 동안 ‘심각’ 단계를 유지 중인 ASF 관리실태 관련 위기단계 조정 검토 필요

	○ 렘피스킨 관리등급 하향 검토 필요 ○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닭전염성기관지염 발생에 대한 백신 도입 등 대응 필요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기관장 상임화를 위한 노력 필요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사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 꿀벌 응애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응애 방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 필요
동물복지환경정책	○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수요조사 및 시범사업 모델발굴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필요 ○ 영농형 태양광 활용을 위한 이격거리 규제 완화 등 방안 검토 및 이격거리 규제 관련 지자체 성공사례, 해외 지원정책 등을 참고하여 정책 반영 필요 ○ 태양광 사업 참여에 따른 농민들의 저조한 태양광 수입 및 금리 인상 피해에 대한 진상파악 필요 ○ 개사육농장 폐업에 따른 잔여건 관리 필요 ○ 개사육 농가의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지원체계 개선 필요 ○ 개사육 전·폐업 농가에 대한 생계비 지원 필요 ○ 동물보호단체에서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등 관리감독 필요 ○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의 적극적인 추진 필요 ○ 반려동물 사후 처리(동물 장묘업)를 위한 이동형 장묘업 확대 도입 등 방안 모색 필요 ○ 등록대상 동물 범위 확대 검토 필요 ○ 반려동물 통계 개선을 통한 신뢰성 제고 필요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프라 부족 문제 대응 필요 ○ 동물병원 진료항목 표준화 노력 필요

	○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를 통한 반려인의 선택권 강화 필요 ○ 동물병원 진료부 발급 의무화를 위한 대응 필요 ○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의 사회적 요구수준 반영을 통한 내실 있는 성과 창출 필요 ○ 고양이 급성질환 사고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마련 필요 ○ 기질평가제 실효성 문제 및 탈락견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충실히 이행하고 농식품부 내 컨트롤타워의 권한 강화 검토 필요
식량정책	○ 쌀 초과생산량 산출 방식 변경과 같이 의심받을 만한 정책변경 행위 지양 필요 ○ 쌀 초과생산량 산출 방식 변경에 대하여 감사원의 감사 필요 ○ 국가재정법상 국고채무부담행위에 해당됨에도 관련 근거 없이 시행되어 왔던 시장격리곡 매입 방식의 위법성 해소 필요 ○ 농협채권 및 정부양곡 정산 사업의 시장격리곡 매입 집행방식 관련 감사원 감사 필요 ○ 쌀값 20만원 보장을 위하여 재배면적 감축, 고품질 쌀 재배, 총체벼 재배, 쌀 수출 활성화 등 실효성 있는 쌀값 안정 대책 마련 필요 ○ 장관의 쌀값 20만원 보장 약속 여부 관련 위증에 대하여 책임질 필요 ○ 쌀값 20만원 유지 및 안정을 위한 15만톤 규모의 추가 시장격리 필요 ○ 공공비축미 수매 물량 조기 배정 및 시·도 배정물량 확대 필요

	○ 천원의 아침밥 사업 대상을 대학 외 보육원, 무료급식소 등으로 확대 필요 ○ 3인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대해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 등과 협력하여 시중 쌀 할인 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 ○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 및 매입 방식의 개선 필요 ○ 가루쌀 활성화 정책의 실적 부진 문제를 고려하여 정책의 축소 방안 마련 필요 ○ 쌀 의무수입 시 쇠미·장립종 구입 등의 예산 절감 노력 지속 필요 ○ 쌀값 하락 대응을 위한 쌀가공산업 활성화 정책의 적극적 추진 필요 ○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해외 공급망 확보 등 종합 대책 마련 필요 ○ 곡물자급률·열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노력 필요 ○ 밀, 가루쌀 등 전략작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가루쌀 지원 사업 관련 업체 선정, 성과 평가, 제품 기준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 필요 ○ 밀, 조사료, 논콩 등 전략작물 직불금의 단가 상향 조정 필요 ○ 공공비축미 수매 시 포대벼 수매 확대 및 영세농·고령농 등에 대한 고려 방안 마련 필요 ○ 2024년도 공공비축미 계획 재수립 및 신곡 추가 수매 필요 ○ 쌀 수요량 산정 방식 변경 시 양곡수급안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를 준수할 필요
--	---

	○ 기후위기를 고려하여 쌀 생산 감축 정책이 아닌 식량 안보와 자급률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쌀 가공식품인 즉석밥의 제조 원가 및 가격의 적절성에 관한 검토 필요 ○ 농어촌공사 관리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및 공사 감리 제도 개선 필요 ○ 시화·화웅 간척지 벼 재배 금지 관련 대안 마련 필요 ○ 새만금 농업용수 공급사업 등 새만금 농생명용지 내부 개발을 위한 예산 확보 노력 필요 ○ 과거 폐지한 쌀 소득보전직불제와 유사한 쌀 가격안정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 필요 ○ 하계조사료에 대한 생산 적기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 정부 지침에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전략작물직불 대상이 되지 못해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존재하는 바, 지침 명확화 필요
축산정책	○ 모든 축종에 대한 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 연장 필요 ○ 소 근출혈 보험의 민간 도축장 가입 확대 등 보상체계 개선 및 근출혈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 필요 ○ 축산 및 가축 방역 분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원활한 대비 확보를 위해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필요 ○ 용도별 차등가격제에 참여한 유업체가 낙·축협과의 계약 물량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필요 ○ 도축장 전기요금에 대한 할인 연장 및 농사용 전력으로 변경 필요 ○ 축산분야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규모 유지 및 예산집행을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영세농가, 소상공인의 등급관정 계란 유통 비중 확대 필요

	○ 농식품부의 미흡한 관리감독으로 인해 이력제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축산물 등급 허위 표시, 이력관리 위반 등 유통업체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 필요 ○ 한우의 경우 다른 축종에 비해 유통마진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국내산 축산물 직거래 판매장 확대를 위해 기존 사업을 개선하여 축산물직거래활성화 지원 사업을 재개할 필요 ○ 송아지 생산안정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퇴역 경주마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강구 필요 ○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계획과 메탄감축로드맵과의 연동강화 및 메탄감축 수단별 구체적 시행계획 보완 필요 ○ 산란계 최소사육면적 확대에 의한 산란계 농가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축종별 육성·발전법 제정 필요 ○ 한돈산업 중장기 발전 대책 수립 강구 필요 ○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예산 확대 필요 ○ 유사산업과의 형평성 및 경마산업의 발전을 위해 온라인 발매 총량 확대 검토 필요 ○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및 유럽연합, 일본에서 사양별꿀을 식품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사양별꿀을 식품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 농식품부 차원의 검토 필요 ○ 마사회 본사의 경북 영천 이전 검토 필요 ○ 축산분야 농업 정책자금 상환기한 연장 및 금리 인하 등 검토 필요
--	--

유통소비정책	○ 도매법인 공공성 강화, 온라인도매시장의 법적 근거 마련, 담합 문제 해결 등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추진 필요 ○ 농산물 비축기지 노후화 문제 해결 필요 ○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산지 조직화 및 규모화 추진 필요 ○ 가격 변동성이 큰 채소, 과일 등에 대한 계약재배 확대 필요 ○ 농축산물할인지원 사업 예산을 전통시장에 확대 배정하여 다양한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책 마련 필요 ○ 생산·수요 등을 고려한 농업관측의 정확도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배달플랫폼 관련 농수산물 원산지 단속 및 표시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신선농산물 불투명 포장재 연도표시제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 농산물 가격 관련 국가별 통계 시스템 마련 필요성 검토 ○ 온라인 유통업체 미정산 사태 관련 자체 감사 및 책임자 징계 요구 필요 ○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수시 개최 및 생산자단체 위원 참여 보장 필요 ○ 농산물 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매뉴얼에 따른 신속하고 선제적인 조치 필요 ○ 농산물 표준 중량 관련 상거래 질서 점검 필요 ○ 법 개정을 통한 농산자조금 지원 강화 및 지출 구조 변경 필요
----------------------	--

	○ 친환경 농산물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유통 관련 허위 · 과대 광고 제재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농산물 가격 하락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영양사 법적 고유업무 보장을 위하여 식생활교육사 민간자격제도 폐지 방안 검토 필요 ○ 스마트APC 지원 사업 예산 삭감에 따른 행정 지원 검토 필요
농림축산검역	○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분양 관련,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적극적인 실태점검 필요 ○ 고위험병원체 활용을 통해 민간과 함께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노력 필요 ○ 검역본부 공무원 직원 처우개선 필요 ○ 꿀벌 질병확산 사전 예방 차원에서 수입 벌집 꿀에 대한 철저한 검역대책 마련 필요 ○ 돼지일본뇌염백신 오염 문제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한 동물용의약품 국가출하 승인 검정기준 및 동물약품 관리감독 강화 필요 ○ 근절되지 않는 동물용 의약품 유통 실태 관련하여 온라인 플랫폼별 각각의 특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 발간 필요
농산물품질관리	○ 공공부문 근로자 처우개선 방안 마련 필요
한국농수산대학	○ 기술 외 전반적 지식 전수가 이루어지도록 교육체계 전반 개선 필요

2. 농촌진흥청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농정	○ 기후변화로 과수화상병 위험이 증가하는 가운데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기술을 적극 활용할 필요 ○ 현장에 맞는 기술 및 품종 개발로 현장 적용률을 제고하고 상용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 노력 필요 ○ kopia 사업의 면밀한 추진 및 그동안의 성과가 사장되지 않도록 관련 부처와 협업 필요 ○ 클로로탈로닐의 위해성 평가 진행, 선진국에서 사용 금지된 농약 품목의 국내 유통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필요 ○ 농업기상재해조기경보서비스 고도화 등 내실있는 운영 필요 ○ 밭농업기계화율 제고 및 성과관리 필요 ○ 기후적응형 등 품종 개발 및 실용화 제고 필요 ○ 종자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자개발 및 수출전략 필요 ○ 농업 분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 필요 ○ R&D 예산 확보 및 인력 부족에 대한 대책 및 R&D 부정 집행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 필요 ○ 농작물 병해충 AI 영상진단 처방 앱 서비스 품질 개선 필요 ○ 사양벌꿀 관련 연구 강화 및 밀원수 식재로 생태계 보전 필요 ○ 신동진 관련 농가 수용성 등 점검 필요 ○ 수입밀과 경쟁할 수 있는 우수한 우리밀 품종개량 및 보급 필요 ○ 수발아율 높은 가루쌀 품종 개선해 농가 보급 노력 필요 ○ 기상, 재해, 병충해 예측정보시스템 통합 및 개선 필요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 쌀 생산량 예측 작물모형 개선 필요 ○ 새만금 간척지의 내염성 있는 사료작물 종자개발 검토 필요 ○ 제주 기후변화 대응 식량작물 연구 강화 필요 ○ 고추 품종개량 및 기계화율 제고 필요 ○ 식방풍 건강기능식품 개발 연구의 조속한 추진 필요 ○ 감귤산업 진흥을 위한 감귤 관련 연구 및 투자 확대 필요 ○ 치유농업센터 구축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및 맞춤형 모델 사업 확대 필요 ○ 치유농업시장에 진입하는 농업인들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한 정책 설계 및 취·창업 연계를 강화한 자격제도 개선 필요 ○ 농업기계기사 자격의 저조한 수요 개선 등 자격제도의 개편 검토 필요 ○ 꿀벌 실종 대응 강화 필요 ○ 농업가공품 메타버스 홍보관에 대한 실효성 검토 필요 ○ 농업관측 정확도 향상을 위한 노력 필요 ○ 벼멸구 피해에 신속한 대응 필요 ○ 토마토빨나방에 대한 대책 수립 및 보상 검토 필요 ○ 검역병해충 시스템 개선 및 지역별 맞춤형 대응 전략 필요 ○ 일반벼 수발아에 대한 관심 필요 ○ 전기 배터리 탑재 농기계 현황 조사 및 관리 필요 ○ 농업현장 온열질환 관련 연구개발·예방사업 확대 및 브로슈어 개선(외국인용) 필요 ○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 및 교육 강화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지원 관리체계 구축 및 지자체 조례 제정 독려 필요 ○ 농약 시험성적서 전산화 및 농약안전정보시스템 등록 완료 필요 ○ 여성농업인의 농업기계 교육 참여율 제고 필요 ○ 신동진 공공비축매입제한 기준인 수량성평가의 문제 지적, 올바른 수량성 산정을 통한 공공비축매입제한 제외 검토 필요 ○ 종자개발 실용화율 및 로얄티 수입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새만금 중심의 사료작물 종자생산단지 구축 필요 ○ 우수치유농업인증제 법적 도입에 따른 사업예산 마련 필요 ○ 약용작물 스마트화를 위한 연구사업 진행 필요 ○ 시비처방기준 완화 및 시비처방서 신속 발급 등 가축분뇨처리 민원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병충해 연구예산 등 기후대응 R&D 예산 복원 필요
운영	○ 검증되지 않은 유튜브 농작물 방제법에 대한 대응 필요 ○ 외부강의 관리 강화 필요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공직기강 강화 필요 ○ 공무원 처우개선 필요 ○ 청사 개방 검토 필요

3. 산림청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국제산림협력	○ 남북산림협력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안 필요 ○ 국외에서 산림훼손으로 생산된 목재펠릿이 국내 유통되지 않도록 공급망 관리 강화 필요
산림산업정책	○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필요 ○ 목재자급률 향상 및 산림고령화 대책 필요 ○ 국내산 펠릿을 사용하여 목재펠릿보일러 이용활성화 필요 ○ 목재산업 규모 및 시장수요 등을 고려하여 목재등급평가사 배출 인력 규모 조절 필요 ○ 임업직불제 지급대상자 확대 및 자격요건 개선 ○ 농촌진흥청 등과 협업하여 밀원수종 관련 연구용역 추진 ○ 숲가꾸기, 벌목을 이용한 생태자연도 등급조정 등으로 무분별한 산림개발 방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부와 적극 협의 ○ 선도산림경영단지 단계적 후속사업 실시 및 예산 확보 필요 ○ 임도 확충 및 노후화 임도 구조 보강을 위해 노력 필요 ○ 임업기계 종합보험제도가 실시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 필요 ○ 산림산업 현장맞춤 인재양성 사업에 대한 점검 강화 ○ 산림사업 및 특정 사업추진 시 공개경쟁입찰 확대 ○ 노지재배 표고버섯, 마, 더덕 등의 재해보험 품목 포함 필요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 탄소중립 등 국가적 과제를 분담하는 개인 산주 대상, 세제지원 도입 방안 적극 검토 필요 ○ 기후적응 및 화재 예방 차원에서 소나무 식재 비율을 낮추고 내화수림 체계적 조성 필요 ○ 국내 산림 과밀화와 수종 영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벌기령 조정 검토 필요 ○ 지역주민 소득 연계, 밀원수 조림 지속 확대 필요 ○ 고성능 임업기계장비 운용인력 확대 및 장비활용률 증대 방안 필요 ○ 흰개미 확산방지 및 피해방지를 위한 연구사업 및 방제대책 마련 필요 ○ 덩굴류 제거를 위한 체계적인 방지책 마련 필요 ○ 임가소득 증대를 위한 실효적인 예산편성과 정책 마련 시급 ○ 임도 신설 시 사유림 토지수용 법적 근거 필요
산림복지 및 산지이용	○ 직접일자리사업 성과평가 지표 현실화 및 직업훈련 연계 강화 ○ 산림사업 안전사고 응급처치 키트 보급 예산 확보 필요 ○ 신불산 모노레일 부실 공사 관련 재발방지책 필요 ○ 산림사업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 필요 ○ 보전산지 전용 허가 시 산림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법규 적용 ○ 휴양림 예약권 거래 남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 필요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 산림복지전문가 자격증 제도의 엄격한 운영 및 변별력 확보 등 개선 필요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납분 조속히 징수, 산림훼손 면적을 고려한 대체산림 조성 관리체계 필요 ○ 숲경영체험림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청요건 완화 ○ 공중보행시설에 대한 안전시설 확충 및 정밀안전점검 실시 ○ 산지전용, 토석채취허가지 재해예방 및 불법토석채취 방지 대책 마련 필요 ○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춘 고품 팔영산권에 남부권 산림치유원 조성 필요
산림보호	○ 새만금수목원 정상 개원 및 새만금국가정원 지정 노력 필요 ○ 산림보전직불제 도입 필요 ○ 1인당 도시숲 면적 및 접근성, 연결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숲을 조성할 필요 ○ 불법산지전용 단속인력 확대를 위해 지자체 등과 적극 협의 필요 ○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처우개선 노력 필요 ○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국가정원 지정기준을 적용할 필요
산림재난	○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제 대책 필요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목에 대한 경제적 가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필요 ○ 정기 계획에 따른 산림헬기 일괄 구매 방식 검토 필요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 NVG 사용을 위해 관계 국가와 적극 협의 필요 ○ 사방시설 정밀점검 미실시, 안전조치 미이행, 준설평가표 미작성 등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 산불위험예보시스템 정확도 제고를 위해 인위적 요인 등을 포함할 필요 ○ 해안방재림 조성계획을 토대로 사업 실적 제고 필요 ○ 한국치산기술협회 성과급 환수 관련 관리·감독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예산 확보 및 지자체별 재정자립도를 반영한 국비 지원 필요 ○ 보유 헬기의 가동중단 및 노후화에 대비하여 신규 헬기 도입 및 부품 수급 방안 마련 ○ 지자체 산불진화헬기 임차 비용 지원 필요 ○ 산불확산예측시스템 활용도 향상 및 활용 매뉴얼 마련 필요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관련 기초 및 실태조사 관리·감독 철저 ○ 땅밀림 위험지도 개발 시 충분한 표본 개수 확보 필요 ○ 산림재난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 구축 ○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처우개선 노력 및 교육훈련 체계마련 ○ 산사태 위험 기초조사 우선지역 대상지 선정 철저 및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적기 실시 ○ 지자체장 및 소속기관장에 대한 산불현장통합지휘 전문교육 철저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 북한 쓰레기 풍선 남하에 따른 대책 마련 시급 ○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관리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필요 ○ 산사태 사업에 대하여 전문성이 결여된 산림조합에 수탁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
기타	○ 지자체 녹지직 공무원의 확충을 위해 노력 필요 ○ 산림청 관리지역 내 전기차 과충전 방지시설 및 리튬소화기 확충 필요 ○ 공공기관 데이터관리시스템에 재해복구(DR)시스템 구축 필요

4. 한국마사회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경영관리	○ 자회사의 일반관리비, 이윤율 상향 조정 등 자회사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모회사의 지원 필요 ○ 법인카드 쪼개기 결제, 증빙누락 등 지침에 맞지 않는 사용이 다수 발견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필요 ○ 매출 및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부채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비상경영이 필요한 시점인 반면, 임직원 평균연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 필요 ○ 마사회 회장의 황제승마 사건에 대한 문제 지적 및 보다 적극적인 책임경영 방안 강구 필요 ○ '23년도 경영평가 세부평가 항목 중 리더십 및 윤리경영에서 D등급을 받은바, 이에 대한 개선 노력 필요
경마·말산업	○ 불법 사설경마 규모 확대에 불구, 불법경마 단속 인력과 예산이 감액되었으므로, 관련 예산 증액 필요 ○ 경주퇴역마 복지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식용금지약물을 투약한 경주퇴역마가 식용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말고기 유통이력제 등 제도 도입 필요
발매사업	○ 도박 중독 유병률이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 대비 높은 반면, 도박 중독 및 예방·치유 사업에 총 매출의 0.4%만 집행되고 있으므로, 중독 예방·치유 사업 예산 확대 필요 ○ 자율발매기 구매상한 위반 문제에 대하여 연속구매 방지 장치 도입 필요

	○ 온라인 발매의 긍정적 효과 및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 발매 총량 확대 검토 필요 ○ 로열더비와 같이 마사회 온라인 회원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는 불법단체 확인 및 불법경마 사전 차단 필요 ○ 온라인 발매 이후 경마 중독성 및 의존도 확인을 위해 고객 구매 성향 분석 필요 ○ 온라인 마권사업 시스템 취약성 관련 작년 국정감사 지적 사항대응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조속한 대응 필요 ○ 온라인 발매 총량이 확대될 경우 사행성이 조장될 우려가 있으므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선행될 필요 ○ 경마감독위원회 개최 등 농식품부와 협의해서 불법도박에 적극적으로 대응 필요
기타	○ 영천경마공원 2단계 공사와 마사회 본사 이전 검토 필요

5. 한국농어촌공사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기반조성	○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액, 공사 지연 등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배수개선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예산 증액 등 조치 필요 ○ 제주 하가지구 배수개선 조속 시행 필요 ○ 시공책임형 CM 도입 검토 필요
수자원관리 및 안전관리	○ 저수지, 방조제, 양배수장 등 수리시설물 노후화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 필요 ○ 늪장대응, 땀질식 배수로 공사로 인한 침수현상 방지 및 상습농지 등에 대한 중장기 대책 마련 필요 ○ 농업기반시설 재해대응력 강화를 위한 재원확보 필요 ○ 안전진단 미 실시 노후저수지에 대한 조속 시행 및 CSG공법 적용 검토 필요 ○ 저수지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비중을 높일 필요 ○ 기후대응 전담조직 인력 보강 필요 ○ 영농환경 변화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 강화 필요 ○ 시설물 무단점용 방지 철저 및 자산관리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공공목적 사용시 사용료 감면 및 면제 검토 ○ 저수지 수질관리를 위한 예산 확보 필요 ○ 석문대호지구 용수공급을 위한 양수장 확보 필요 ○ 김제시, 부안군, 군산시 배수개선 설계사업 필요

	○ 농업배수시설 관련 보상규정 마련 필요 ○ 아호배수장 부실관리로 인한 침수피해에 대한 피해보상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 필요 ○ 탐정저수장 저수율관리 부실에 따른 보상 필요 ○ 기상이변으로 인한 극한호우에 대비하여 사전 방류시설 등 확충 필요
농지은행 및 농지관리	○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 환매요율 인하 검토 및 대책수립 필요 ○ 농지연금 수시인출형에 대한 예산확보 및 개선 필요 ○ 임대수탁 임차인 선정시 현장여건에 따른 탄력적 운영 필요 ○ 임대수탁 임차수수료 임차인 전가 문제 개선 필요 ○ 농지이용실태 전수조사 및 농지에 대한 관리체계 모니터링 강화 필요 ○ 농지은행 플랫폼의 일대일 맞춤형 원스톱서비스 추진 및 안내·홍보 강화 필요 ○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지은행 제도개선 필요 ○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의 타작물 재배와 휴경지 임대료 감면 수준 차등화 필요 ○ 농지연금 가입률이 낮은 지역에 대한 가입 독려, 농지연금 월지급금 인상, 지역별 편차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경영관리	○ 직원대출 금리인하 및 한도초과 등 지침위반 대출에 대한 감사와 개선조치 필요 ○ 대술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공익신고 관련하여 신분상 처분 등 조속히 조치 필요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여성 임원 비율 20%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재해·재난을 대비해 철저한 데이터 관리 필요
기타	○ 김제 혁신밸리 스마트팜 하자보수 관리 및 보상 마무리 철저 ○ 스마트팜 대규모 하자, 사업지연에 대한 자체적인 일제점검 필요 ○ 김제 스마트팜에 하자 발생 관련 감사원 감사요구 필요 ○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관리가 미흡한 바, 개선방안 마련 필요 ○ 하도급 대금 미지급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 및 보완 필요 ○ 오산시와의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용수로 대체시공으로 농지감소 및 농업인피해가 우려되므로, 손익비교, 환경영향,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등에 관한 재조사 필요 ○ 밭농업 관련 경지정리 계획 수립 필요 ○ 농어촌공사가 수행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해 외부감리 제도를 도입할 필요 ○ 입찰담합에 대한 소제기 기간 도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조치 및 예산상 배임사건에 대한 전수조사 등 필요 ○ 정부경영평가 중 청렴도평가 및 안전관리등급평가 결과가 부진하므로 청렴도를 회복 및 안전사고 예방 방안 마련 필요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징계제도 보완을 위한 내부 규정 개선 필요

6.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수급안정	○ 견고추 등 수입농산물 잔류농약 초과 검출 관련 안전성 관리 철저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필요 ○ 농산물 할당관세 최소화 및 물가안정 효과 검증 필요 ○ 품목별 위기단계 관리 가이드라인 기준 개선 등 기후위기 대응 수급안정 대책 마련 필요 ○ 수입쌀이 국내 쌀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수입쌀의 용도를 사료용·원조용으로 전환할 필요 ○ 통계 농업 추진 및 선제적 시스템 구축 등 수급조절 실패에 대응한 구체적 방안 마련 필요 ○ 비축 농산물의 폐기 물량 최소화 방안 및 농산물 폐기물 재활용 방안 검토 필요 ○ 노후화된 비축기지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비싼 수입산 중심의 비축사업 운영 문제 해결 및 국내 농산물 비축량 증대를 위한 예산 마련 필요 ○ 공공 비축기지 추가 구축 및 민간 비축기지 기준 완화 필요 ○ 농산물 수입 방안 외의 농산물 가격 상승 대응 방안 마련 필요 ○ 수입콩 운송비 지원 정책의 공정성 확보 및 대기업 혜택 방지 대책 마련 필요 ○ 국산밀 소비 활성화를 위한 학교급식, 공공급식 등 활용 대책 마련 필요 ○ 배추값 폭등에 대응한 정부 비축사업 개선 방안 마련 필요

	요 ○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국산 밀·콩 관련 종합적인 계획 마련 필요 ○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관련 온라인 유통업체 미정산 사태에 대응하여 농식품업체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필요
유통개선	○ 유통구조 개선으로 유통비용 감소와 농가수익 증대 위한 개선 대책 필요 ○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신속한 제정 추진 노력 필요 ○ 신선식품 수급이 어려운 식품 사막 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필요 ○ 공공급식통합플랫폼 이용률 제고 방안 및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업체의 부정행위 근절 방안 마련 필요
수출진흥	○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신선 농식품 수출 증대를 위해 시설투자 등 실효성 있는 수출 확대 방안 마련 필요 ○ 농식품 수출국 편중 문제에 대응하여 다변화 방안 마련 필요 ○ 대기업에 편중된 국내 농산물 수출 지원 지양 필요 ○ 수출물류비 지원 폐지에 따른 농업인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 마련 필요 ○ 쌀값 안정을 위한 쌀 해외시장 활로 개척 방안 마련 필요
기타	○ aT센터 상사관 운영 취지에 부합하도록 농수산식품 관련 기업 입주 확대 필요 ○ 정부경영평가 계량지표 감사원 지적 관련 재발 방지 대

	책 강구 필요 ○ 정부경영평가와 청렴도평가 등급 하락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 필요 ○ 공사 사내대출 제도 및 혁신지침 준수 필요 ○ 해외지사 자체감사 결과 관련 관리체계 개선 필요 ○ 지역별 안배를 고려한 내부 인사 정책 필요 ○ 자회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적절한 일반관리비 비율 유지 필요 ○ 온라인 유통업체 미정산 사태 관련 농식품업체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필요 ○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 근절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른 성과급의 등급별 차등화 방안 마련 필요 ○ 식품외식종합자금 지원이 국산 농산물 및 식재료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 소각되는 폐농작물을 재활용하여 친환경 제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

7. 축산물품질평가원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축산물 등급제도	○ 돼지고기 등급제도를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개선 필요 ○ 축산물 이력제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축산물이력제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대책 필요 ○ 벌꿀 등급제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필요
축산유통	○ 한우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 노력 필요 ○ 한우의 유통과 관련하여 담합 등 부정행위가 있는지 파악하는 등 축산물 부정유통 근절을 통해 국민불신 해소 노력 필요

8.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경영 관리	○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한 비상임 기관장의 상임화 전환 노력 필요 ○ 가축방역사 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없도록 증원 및 처우개선 노력 필요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현장 직원의 안전사고 및 인수공통 감염병 예방 대책 수립 필요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홈페이지 웹 접근성 인증 획득 및 재해복구시스템(DR) 구축 추진 필요
사업 관리	○ 드론을 통한 축산농가 소독 시 소독제 비산에 의한 인근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수립 필요 ○ 수입 식용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능 검사의 표본 검사 개체 수 확대 필요

9.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연구개발사업 평가관리	○ 스마트팜 사업 관련 초기 비용 부담 완화 등 청년층 정착률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청년 창업형 후계농 지원에도 불구하고 청년 농업인 비율이 낮은 이유에 대한 검토 및 관련 교육 프로그램 보완 필요 ○ 농생명자원 분야의 투자가 단절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기술 개발전략 필요 ○ 농업 위기 극복과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R&D 예산 확대 필요 ○ 노지농업 생산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기술 경쟁력 확보 방안 필요 ○ 밭농업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한 추진계획 필요 ○ 노지농업과 식량자급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관련 추진계획 필요 ○ 우리 농업·농촌 현실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통해 농촌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제고 및 농업인 소득 향상 노력 필요
기관운영	○ 전세사기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및 이에 따른 이자비용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재발방지 노력 필요 ○ 유사시 데이터 관리를 위해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계획 필요 ○ 균형 있는 인재 운영을 위해 여성 임원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 필요

10.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농업정책 보험 사업관리	○ 벼멸구, 배, 레드향, 단호박 등 열과 피해 등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 피해에 대한 보상 인정 및 보장 범위 확대 등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 산정 방식 및 피해 조사방식 등 개선 필요, 할인할증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필요 ○ 원예시설 폭염 피해 보상 관련 약관 개선 필요 ○ 농업 분야와 어업 분야의 재해보험의 차별적 운영 지적, 어업 분야 재해보험 정책에 적극 나설 필요 ○ 농작물재해보험 병충해 보장 확대 필요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 필요,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고수온 재해를 주계약으로 하는 방안 검토 필요
농식품 모태펀드 운용	○ 투자 과정에서 균형발전에 대한 고려가 없어 대부분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몰려 있음. 비수도권 지역 투자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기관운영	○ 기관 명칭에 어업 관련 사업도 반영할 수 있도록 변경 필요

11.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기관 운영	○ 재해 발생시 데이터 관리방법 및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계획 마련 필요 ○ 경쟁입찰·수의계약 비율에 대한 현실적인 목표 수립 필요
기타	○ 매미나방 탐지장비 개발, 자율비행 로봇 탐지시스템 등 향후 계획 질의

12.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사업관리	- o 여성농업인 영농여건개선교육사업 강사 강의만족도 평가 항목에 ‘정치적 중립성 평가’ 추가 검토 필요 - o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자격제도 관련 심사 세부기준표 마련 필요

13. 한식진흥원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사업운영	- o 한식 인기가 높아짐에도 한식 홍보 예산이 감소되고 있는바, 한식홍보 예산 확보 필요 - o 한식진흥원 브로슈어 및 홈페이지 등에서 한식 표기법 및 조리법 등 오류가 발견됨에 따라, 임직원 역량강화 등 대책 필요 - o 중국이 돌솥비빔밥을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하여 한식을 우리문화로 알릴 수 있는 가시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할 필요 - o 외국어 번역·감수인력의 상주 배치 방안을 검토할 필요

14.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사업운영	- o 국가식품클러스터 분양률 제고, 연구소 유치, 연구용역 수행, 산학연 기술지원 등을 위한 국비 확보 필요 - o 서부권 이외 지역에서도 진흥원 인프라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권력별 교류협력 지원사업 적극 확대 필요 - o 한식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을 확대할 필요

15. 축산환경관리원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및 사후관리	○ 동물복지축산농장 확대를 위한 점검강화, 제도개선 등 활성화 노력 필요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 깨끗한 축산농장 10,000호 조성사업 관련 농가관리 및 사업 활성화 등 노력 필요
정보보안	○ 웹 접근성 인증 이행 여부 등 종합점검 필요 ○ 유사 시 데이터 관리를 위해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필 요

16.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주요사업	○포도잎을 활용한 화장품 기업 사업화 지원 필요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공모방식 및 갱신절차 개선 필요 ○과수 질병에 강한 무병묘목 개발·보급 촉구 ○벤처육성 지원사업 공정성 제고 및 보조금 관리 시스템 필요
경영일반	○전세보증금 사기 관련 재발방지 대책 마련 필요 ○자체수입예산 적극 편성을 통해 결산잉여금 최소화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이행 ○재해복구 시스템 시급히 구축 필요 ○직무관련 공무원 전문가 수당 지급 제한 필요

17. 한국임업진흥원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임업	○ 지속적인 산림일자리발전사업 수행 필요 ○ 지속적인 해외조림사업 추진 필요 ○ 수출 유망 상품 발굴의 성과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시장 다변화와 고부가가치화 전략 계획 필요 ○ 고가시험분석장비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임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필요 ○ 산양삼 채종단지의 활용 강화 필요 ○ 나무의사 자격시험 난이도 조절 등 시험제도 개선 필요 ○ R&D 예산 삭감에 따른 대응책 마련 필요
기타	○ 신청사 설계 관련 공정한 심사위원회 운영 필요

18.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산림치유	○ 학교폭력 피해학생 중심의 치유 프로그램 확대 필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발급 확대 등 지속적인 개선 노력 필요
산림복지 인프라	○ 경기도 등 인구 밀집 지역에 산림복지시설을 확충할 필요
	○ 무장애나눔길 확대 실시 필요

19.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수목원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내 장기 미운영되고 있는 춘양목산림 체험관 철거 등 대책 마련 필요 ○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의 접근성 개선 필요 ○ 수목원 내 전시관 표찰 및 안내판의 정확도 제고 필요
정원	○ 해외에 조성된 한국정원에 대한 유지보수관리 계획 수립 재검토 필요
기 타	○ 신입직원의 높은 퇴사율 개선 방안 마련 필요

20.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숲길	o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동서 트레일의 전국 확대 필요
운영	o 과도한 수익계약 비율 개선 필요 o 차량운행일지 관리 철저 필요

21. 한국치산기술협회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산사태	○ 산사태 현상을 해석하는 지반공학 분야 기술자 및 박사 등 전문인력 확보 필요 ○ 산사태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강화 필요 ○ 사방시설에 대한 관리·점검 및 안전진단 철저
운영	○ 협회의 수입금을 넘어서는 범위에서 성과급 지급 및 예산·회계에 미반영 등 시정 필요

2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농협일반 및 교육지원	○ 임원 등 주요 보직에 남성이나 특정지역 출신자가 편중되지 않도록 성별 및 지역별 균형을 고려한 인사 실시 필요 ○ 장애인 의무고용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과도한 부담금 납부 발생 방지 필요, 중증장애인 생상품 우선구매제도 이행 계획 마련 필요 ○ 농협 계열사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므로 비정규직 차별 관련 개선대책 마련 필요 ○ 조합장 특별퇴임공로금 지급 관행에 대한 조치 필요 ○ 협치모델 촉진법 활성화를 위한 관심과 노력 필요 ○ 농협중앙회의 사회공헌비 확대 필요 ○ 수익계약에 대한 예외규정을 통해 농협 자회사와의 수익 계약을 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므로 개선 필요 ○ 법률 자문비 지출이 과다하므로 지침 마련 등 절차 정비 필요 ○ 연임을 고민해 본 적 없다는 농협중앙회장의 답변은 위증 혐의가 있으므로 위원회 차원의 고발 필요 ○ 도시농협과 지역농협의 상생기금 출연 확대를 위해 출연율 상향 조정 검토 필요, 도시농축협의 적극적 참여 독려 및 지원 필요 ○ 조합원 수 감소에 따른 농축협 설립인가 기준을 완화하고 지역축협에 가입 가능한 농업인의 범위를 확대하여 조합원 자격 기준 완화 필요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 무자격조합원의 선거참여로 인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 ○ 외부회계감사 실시 주기 현행 4년에서 단축하는 등 제도 개선 필요 ○ 공공형 계절근로자 관련 실무지침을 마련하고 실태 파악 및 관리 강화 필요,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농협에 대한 지원 필요, 공공형 계절근로자 온열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강화 필요, 공공형 계절 근로자 인신매매 피해 실태 등 파악 등 필요 ○ 농협 운영 노인복지시설 시설장의 경력·급여 기준 지도 필요 ○ 농신보 법인보증 갱신시, 연대보증제도 운영에 대한 점검 및 개선 필요, 실제 농업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보증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 대책 필요 ○ 임직원의 부정부패를 근절할 방안 마련 필요 ○ 농협네트웍스의 과도한 내부거래 비중, 과도한 공사독식 등의 문제, 시공사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 문제를 잘 살펴볼 필요 ○ 농업지원사업비는 인건비 등 사업관리비보다 실제 사업비에 편성되도록 할 필요, 농업지원사업비의 안정적 확보도 필요 ○ 준법교육 실시, 조합 감사처의 기능 보강, 상임감사제 도입 확대 등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지역 농축협 금융사고 근절 방안 마련 필요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 지역농협 경제사업 부실규모 증가에 따라 구조조정(합병)을 통한 경영정상화 필요 ○ 국회의원 로비 창구로 악용될 우려가 높은 농정협력위원회 해체 필요 ○ 농업인을 위한 농협재단 운영 및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기부금 납부 필요 ○ 농업분야 실무경험이 적은 사외이사에 대한 부적절함 지적, 이에 대한 후속 조치 필요
상호금융	○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인력충원 등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및 대응방안 마련 필요 ○ 상호금융 이용 농업인의 고금리 부담완화를 위한 노력 필요, 조합원 신용회복을 위한 지원 필요 ○ 지역조합의 일정한 규모 이상 및 건설업이나 부동산업에 대해 이루어지는 공동대출 건 관련 사전검토 강화 필요 ○ 연체율이 높은 조합에 대하여 부실채권 매각 등 자구 노력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 업무지도 등 연체율 및 건전성 관리를 위한 노력 필요
농업경제	○ 농협경제지주가 구매권을 독점하는 구조를 탈피하고 농협유통과 하나로유통이 통합되는 농협 유통회사의 조직개편 검토 필요 ○ 하나로마트의 납품업체 갑질 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유통구조 개선으로 식료품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데 적극 노력 필요 ○ 기후 데이터를 토대로 농식품부 등과 협조하여 농작물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재배 적지 관련 지도 마련 필요 ○ 농협가공유통 판로확보와 민간위탁 참여 등 용역을 포함하여 군납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필요 ○ 국산종자 판매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전략작물 육성을 위한 소비처 확대 등 전략적 대책 마련 필요 ○ 농협 농축산물 판매 플랫폼의 농축산물 가격이 민간 기업보다 높은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 필요 ○ 단위농협 적자에 따른 쌀 매입의 어려움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쌀 가격 안정을 위한 실질적 쌀 소비 대책 마련 필요 ○ 국가재정법상 국고채무부담행위에 해당됨에도 관련 근거 없이 시행되어 왔던 시장격리곡 매입 방식의 위법성 해소 필요 ○ 구매권 이관, 자본잠식 등 유통자회사 문제 개선 필요 ○ 농협유통 관련 정규직원 채용 약속 이행 및 비정규직 차별 문제 해결 필요 ○ 농협경제지주회사 임원의 지역별 안배 고려 필요 ○ 농협 쌀국수 쌀 함유량 저조 문제 개선 및 가격 경쟁력 강화 필요 ○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에 대한 농축협 하나로마트의 참여 확대 필요 ○ 계약재배를 통해 저렴하게 농산물 구입하는 등 적극적 물가 안정 노력 필요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 농민조합원의 농협 경제사업 미참여 문제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부실화 문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일부 지역농협의 수산물 판매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 필요 ○ 전략작물직불제 추진에 따른 농협 차원의 대책 및 지원 마련 필요 ○ 농산물 수급불안 품목의 계약재배율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농협무역의 농산물 수출 역량 강화 및 비농협계통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쌀 적정가격 유지를 위하여 재배면적 감소, 고품질 쌀 생산, 쌀가공식품 개발, 장립종 쌀 재배 등의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유기질비료 및 무기질비료 정부지원 지속 필요 ○ 농업진흥구역·개발제한구역 내 자재판매장 설치 허용 ○ 이동장터 적극 지원으로 식품사막화 문제 해소 필요 ○ 지역농협 및 하나로마트 원산지 표시위반 방지대책 마련 필요 ○ 공동퇴비제조장 오염물질 저감시설 의무 유예 및 지원 필요 ○ 지역농축협 경제사업 평가기준을 농산물 판매 중심으로 변경하고 경제사업의 비중을 확대할 필요
축산경제	○ 국내산 축산물 경쟁력 확보 방안 마련 필요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 연장을 위한 대응책 마련 필요 ○ 축산업 특성을 반영한 외국인근로자 비자 제도 개선 필요 ○ 사료비 절감 등 한우농가 경영 안정 노력 필요 ○ 2,255억원이 투입된 안심축산 사업 운영에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당초 목표 달성을 위해 시스템의 재구축 필요 ○ 과도한 축사거리 제한으로 축산농가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사료값의 조정, 암소 격리,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 한우 산업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금융부문	○ 내부 통제 강화 및 상시감시시스템 구축 등 금융사고 예방 대책 마련 및 무관용 인사적 조치 등 방안 마련 필요 ○ 준법감시인 제도 관련하여 조직에 금융규제, 법률 등 경험을 가진 외부전문가를 채용하고 업무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 필요 ○ BIZ-IT 공동근무 센터 이전 관련하여 타당성 검토 및 의견 수합 과정 등을 거쳐 결정 필요 ○ 금융취약계층을 고려한 투자상품 판매기준 수립 필요 ○ 정책자금 부적격 대출심사 강화 필요 ○ 보이스 피싱 예방을 위하여 인력의 전문성 확보와 시나리오 운영 등에 대하여 보완 필요 ○ 농민을 위한 은행의 이자수익 환원 및 사회공헌 금액 증대 필요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 지역조합의 금고유치 확대 지원 필요 ○ NH손해보험의 손해사정법인 물량 배정 기준, 손해조사비 지급기준, 조사범위 등 개선 검토 필요 ○ 농림축산식품 분야 벤처에 대한 투자 발굴 및 지방의 농식품 유망벤처 발굴 등 지방투자 확대 방안 마련 필요 ○ 농기계종합보험 농협 분담률 상향 필요

23. 산림조합중앙회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임업	○ 산림사업법인의 산림사업 입찰경쟁 참여로 인해 산림조합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상생) 방안 마련 필요 ○ 산림기술자의 경력 및 자격취득 방식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 ○ 산림조합의 정원 조성사업 참여에 대한 관련법 개정을 위해 산림청과의 협의 추진 필요 ○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의 손실보전 대책 강구 및 향후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중앙회의 입장 ○ 푸른장터 및 임산물직매장의 사업수익과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해외자회사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관리 감독 방안 마련 필요 ○ 수목장 및 묘지관리 사업 등 산림조합 장제사업의 대국민 홍보방안 마련 필요 ○ 산림조합의 협치모델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임업관련 경력 전문 인사에 대한 문제지적 및 대책 필요
금융	○ 지역조합 연체율 제고를 위한 중앙회 중심의 TF팀 구성 및 부실채권 청산을 위한 자회사 구성 등 실효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
기타	○ 산림조합 간부직원 자격전형제도의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데이터관리를 위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필요 ○ 조합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필요 ○ 공무국외출장 관리 강화 및 개선 방안 마련 필요

24. 해양수산부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해 양	○ 여수박람회장 선투자금 3,658억원 박람회장 재투자 필요, 불가피시 10년 분할 상환 필요 ○ 해양수산 분야 R&D 투자 강화 필요 ○ 출연연구기관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 필요 ○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사업 정상추진 도모 필요 ○ 내수면 마arina 개발 등 관련계획 및 정부 지원계획 별도 보고 필요 ○ 부안군에서 추진중인 중국발 크루즈의 부안군 입항에 해수부의 협조 필요 ○ 전북 지역특화형 크루즈 특구 필요 ○ 경남해양과학고 잠수·수상안전센터 설치 필요 ○ 일본에 투명한 후쿠시마 원전 폐기물 관리와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등 오염수 방류 중단 노력 계속 필요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해수부의 적극적인 역할 당부 및 과학적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정보 제공 필요 ○ 잠재적 해양오염 및 사고 요인인 침몰선박의 관리 철저로 2차 사고 예방 방안 마련 필요 ○ 온배수 배출관리에 대해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 필요 ○ 핑크돌핀호 사고 관련 재발방지 방안 마련 필요 ○ 정부주도의 해상풍력을 추진하고, 풍향 계측 단계부터 엄격한 관리 필요

	○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에 적극 참여하고, 해양오염과 생태계 영향에 대한 조사와 검토 필요 ○ 육상기인 해양쓰레기 저감 및 차단 위해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 및 환경부·지자체 등 범정부 차원의 협업체계 구축 필요 ○ 해양폐기물 발생량 자료 갱신 및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 필요 ○ 해양 미세플라스틱 조사 예산 확보 및 미세플라스틱 오염 방지 대책 수립 필요 ○ 서해5도 등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지원 강화 필요 ○ 친환경 방충재 개발 등 선박 방충재로 이용되는 페타이어 관리 강화 필요 ○ 밍크고래 해양생물보호종 지정 검토 필요 ○ 해상생태허브공원 조성 등 남방큰돌고래 보호 종합대책 포함 해양보호생물 관련 대책 수립 필요 ○ 기후소송(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 결과 관련, 탄소감축 세부 실행계획 점검 필요 ○ 습지보호지역 또는 연안지역에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시 해양환경에 대한 면밀한 영향평가 필요 ○ 자연친화적 방식으로 블루카본 흡수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점검 필요 ○ 해역이용협의 시 해안침식에 대한 영향성 검토 필요 ○ 독도 및 울릉도 표기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등 독도에 대한 해수부의 전향적인 태도 전환 필요
--	--

수 산	○ 국립해양과학관 관장 등 해양수산 경력 전문 인사 임명에 대해 점검할 필요 ○ 일본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하여 야당 괴담으로 인해 1조 6,000억원의 혈세가 낭비되었다는 정부의 왜곡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공표 필요 ○ 고수온 피해 어업인에 대한 어업경영자금 상환기한 유예 및 이자감면 지원 필요 ○ 단위수협 여신건전성 관리·감독 철저 필요 ○ 수산정책자금 부정수급 예방 대책 필요 ○ ‘해상풍력 친화 수산업 융합기술 개발’ 사업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 필요 ○ 중국산 단김 유통 단속 필요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온라인상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MOU 이행 필요 ○ 수산대전 사업 대상자 선정 시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한 방안 마련 필요 ○ 수산물 물가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 ○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이 어업인 소득증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할 필요 ○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추진 시 전통시장 지원을 확대하고, 부정행위 단속 필요 ○ 플라스틱 어상자 보급 확대 필요 ○ 어민 보호를 위한 군급식 관련 수산물 수의 계약 비율 70% 유지 필요
-----	---

	○ 노후 삼천포수협 위판장 시설 현대화 검토 필요 ○ 충남 서천 국제 마른김 거래소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재정적 지원 필요 ○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 시 생산량 고려 등 지역 형평성 제고 필요 ○ 수산장비임대사업 사업 시행 이후 장비구매까지 장기간 소요되므로 지자체 사업시행 관리 필요 ○ 고수온 피해보상 사각지대 없도록 양식보험 재개편 검토 필요 ○ 어선원 산업재해 예방과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대상 확대 검토 필요 ○ 참다랑어 양식산업 활성화를 위해 양식보험 도입 검토 필요 ○ 고수온 보장을 주계약 담보에 포함하도록 검토 필요 ○ 고수온에 따른 해파리 관리대책 마련 필요 ○ 낚시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의 관심 필요 ○ 어구실명제 위반 단속 강화 필요 ○ 어구보증금제 도입 시점, 제도 효과와 문제점 파악 및 자망·부표 대상 제도 확대 필요 ○ 폐어구 집하시설 등 회수관리 인프라 확대 필요 ○ 내실 있는 어구 관리 정책을 위해 사업 점검 필요 ○ 「수산업법」상 어구관리제도와 연계한 수산업 폐어구 관리 필요 ○ 인증부표 교체로 발생하는 페스티로폼 부표에 대한 처리 대책 마련 필요 ○ 수명이 다한 인증부표의 회수방안 마련 필요
--	---

	○ 생분해성 부표 또는 환경 피해가 없는 제품을 보편화 시키고 해양생태계 보전 및 어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대책 마련 필요 ○ 중국 불법어업에 대한 강력한 대응 필요 ○ 한·중 어업협정 이후 양국어선의 실질적 조업불균형 해결을 위한 노력 필요 ○ 금어기·금지채장 위반 어획물 판매 온라인 업체 단속 필요 ○ 한일어업협상 재개와 재개 시 국익 고려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 ○ 어선 임시검사 수검대상을 명확히 하고, 어선의 개조 또는 수리 시 즉시 검사를 위한 수리업체 임시검사 권한을 부여하는 등 제도개선 필요 ○ 서해5도 어업인들의 조업권 보장을 위하여 어선 정기 검사 비용 지원 등을 검토할 필요 ○ 어업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상시 착용에 불편함이 없는 구명조끼 보급 확대 노력 필요 ○ 중대재해처벌법 5~49인 사업장 적용 확대에 따라 재해율이 높은 어선어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등 세밀한 계획 검토 필요 ○ 고래 혼획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어선청년임대사업 조업실적 저조한 이유 조사 필요 ○ 육지부 대형어선의 제주 연안어장 조업으로 인해 어족 자원 고갈이 심해지고 있는데, 대책 마련 필요 ○ 감척 효과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감척 효과를 상쇄하는 다른 요인 분석 필요
--	---

	○ 근해어선 위주 감척 필요하며, 감척 연안어선도 재임 대하는 방식 검토 필요 ○ 감척한 대형어선의 경우, 공익목적 활용방안 검토 필요 ○ 어선거래시스템 이용률 저조 개선 필요 ○ 해상유류저장부선(삼천포수협) 관련 육상부지마련 단계 부터 지원방안 적극 검토 필요 ○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 지원금 기준 개선 필요 ○ 연근해어선의 감척 효과를 상쇄하는 요인 분석 및 감 척 어선 활용 방안 검토 필요 ○ 고수온 피해 산정 시 수온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피해 추산을 위한 제도보완 필요 ○ 긴급방류 제도 개선 필요 ○ 현실성 있는 고수온 피해대책 마련 필요 ○ 저수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양식어류를 이동시킬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 고수온에 따른 양식 굴 폐사 피해지원대책 마련 필요 ○ 수산자조금 사업의 거출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검토 및 기후위기 대응 자원으로 활용 등 수산자조금 용도 확대 방안 검토 필요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조속한 개정 및 관련 입법 개정 등 제도개선 필요 ○ 해양 미세조류를 수산양식 대상 종으로 등록시킬 수 있도록 제도 보완 필요 ○ 온난화로 인한 해상 양식 한계에 따른 육상 어류 양식 필요
--	---

	○ 기후변화 시대에 어민의 소득 증진과 안정적 생계 유지를 위해 스마트 양식 활성화 지원 검토 필요 ○ 효율적인 내수면 어업 관리를 위해 지자체에 사무를 위임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 검토 필요 ○ 내수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 필요 ○ 참다랑어 양식산업 활성화 지속적 지원 필요 ○ 농사용 전력 수산업에도 확대할 필요 ○ 급격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가중된 양식어업인의 부담을 해소할 대책 마련 필요 ○ 수산업 현대화 및 에너지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양식 모델 마련 필요 ○ 강릉 질병예방연구센터 건립 부지 재검토 필요 ○ 내수면 어종 중 송어, 뱀장어 외 메기, 향어, 붕어 등 다른 어종에 대한 관측 자료 조사 필요 ○ 양식장 유해생물의 자원화 시설 설치를 통한 유해생물 퇴치와 안정적인 양식 소득 기반 마련 필요 ○ 동해안권에 어항관리선 추가 배치 필요 ○ 미조항 정비사업 조기 개발을 위한 사업비(설계비) 반영 필요 ○ 국가어항 지정 후 설계 중인 향화도항의 민원조기 대응 및 예산 지원을 통한 차질 없는 추진 필요 ○ 국가어항 신규 지정 예비 대상항(10개소)의 타당성조사 용역비 예산 반영 필요 ○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개야도항의 사업 진척 검토 필요 ○ 귀어인구 유입에 치중된 귀어귀촌 종합계획, 귀어인구
--	---

	이주에 따른 감소대책 마련 필요 ○ 농림부의 영농정착지원금처럼 해수부에도 청년 어업인에게 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 필요 ○ 어촌소멸 대응을 위해 귀어인구가 많은 전남 지역에 대한 귀어학교 추가 설립 필요 ○ 전북 부안지역에 귀어학교 설립 필요 ○ 해녀문화유산의 보전·전승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필요 ○ 해양수산부가 사실상 방사능 3개 핵종만 감시하고 있으므로 감시 핵종 확대 필요 ○ 중국산 단김 유통, 가공 안되도록 해수부 조치 필요 ○ 위생약정 체결 대상국 확대 등 수입 수산물 위생관리 강화 필요 ○ 어촌뉴딜300 사업관련 감사원 지적사항인 체험프로그램 성과물 활용, 국고보조금 집행관리, 사업기간 내 완료 등 조치를 통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어촌뉴딜300 사업효과 검증 필요 ○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집행실적 제고 필요 ○ 교육부와 협의 통해 남해에 신설되는 수산과학고에 잠수기능사 훈련센터 설치 검토 필요 ○ 부안 낚시 활력타운 조성을 통한 대체소득원 개발 필요 ○ 전북 중심의 가공시설 지원 사업 확대 및 김산업 진흥지구 지정 등 확대 필요 ○ 후쿠시마 대응예산에 대한 거짓뉴스 지적 및 실효성이 있는 사업을 재검토할 필요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 필요
--	--

	○ 고수온 피해산정 기준을 치어와 성어에서 중간어까지 확대 적용할 필요 ○ 재난지원금 한도 상향 통한 피해복구지원 현실화할 필요 ○ 고수온 피해 양식어가에 대한 영어자금 상환 유예 및 이자 감면 등 금융지원 필요 ○ 갯벌 안전사고 대책 마련 필요 ○ 새꼬막 등 갯벌 수산물 생태계 복원을 위한 갯벌 재생 사업 추진 필요 ○ 바지락 폐사 관련 환경영향평가 실시 등을 통해 원인 규명 및 체계적인 대책 마련 필요 ○ 매년 수십조 원의 농축수산물식품 무역적자에도 불구하고, 수출실적 홍보에만 매달리는 행태 개선 및 수입 농축수산물식품 등에 따른 농민 피해 보전대책 마련 필요
해 운	○ 해기사 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해양 관련 학교 부설 확대 노력 필요 ○ 어업분야 임금체불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 필요 ○ '24년으로 일몰되는 톤세제 연장 노력 필요 ○ 4대 항만공사 중 자회사 형태의 직원으로 고용한 2개 항만공사에 한해서 고용노동부의 자회사 운영 실태조사 관련, 나머지 2개 항만공사에 대해서도 실태조사 및 평가받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 ○ 적자 여객선 항로의 운항결손금 지원대책 강구 필요 ○ 한국해운조합의 불합리한 업무관행 및 특정 용역업체와의 장기계약 특혜 의혹 등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선원 복지기금의 제도적 근거 마련 및 투명하게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평택항을 비롯한 수도권 항만 교육대상자들을 위해 출장교육 등을 통한 선원 관련 법정교육 실시 및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분원 설립 필요 ○ 평택항의 친환경 선박연료 병커링 마련 필요 ○ 급유선을 통한 면세유 병커링 시 정량 주유 필요 ○ 부산신항만 주식회사(PNC)의 검수업체 갑질 관련 확인 및 조치 필요 ○ 장기방치·계류선박의 해양오염 문제 해결 필요 ○ 항만울타리 내 설치된 중국산 CCTV 보안 취약 관련 대책 마련 필요 ○ 항만경비 노동자들에 대한 교대제 개선 등 처우개선 필요 ○ 장기계류선박 관리·감독 강화 및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국적선원 감소에 따른 비상시 인력 동원 방안 마련 및 외국인 선원 이탈률 방지에 관한 대책 강구 필요 ○ 국적선원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선박저속운항 참여율 부진하므로, 정책적·제도적 지원 강화를 통해 활성화 대책 마련 및 의무제 도입 적극 검토 필요 ○ 항만보안 업무 일원화 및 임금·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검토 필요
해 사	○ 해상운송 전기차 화재에 대비하여 조속한 연구개발, 대응장비 보급 및 이용객 불편 최소화를 위한 노력 필요 ○ 한-일 국제여객선 컨비틀호(일본국적)에 대한 안전 확

	보방안 마련 필요 ○ 해양수산분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원활한 녹색 해운항로 구축 추진 필요 ○ 「녹색해운항로법」 제정 및 ‘녹색연안해운항로’ 지정 검토 필요 ○ 한강버스 사업자 선정관련 감사원 감사 필요 ○ 북한 GPS 교란에 대한 어업인 및 선박 피해 저감을 위해 eLoran 수신기 설치 등 대응방안 마련 필요 ○ 단말기 보급 확대를 통한 바다내비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 사업의 중·장기적 예산 계획 수립 및 보고 필요 ○ 바다내비 설치율 및 활용률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항 만	○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의 선정 사업자가 특급 호텔 대신 생활형숙박시설을 짓는 것에 대해 ‘사기 또는 기망’ 등에 해당하는지 법률자문을 받아보고,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 필요 ○ 국가가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연안정비사업의 범위를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에서 2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축소하여 지자체가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연안정비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연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 연안침식의 심각성과 지자체 재정건전성을 고려할 때, 정부는 재정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여 상향조정된 총공사비를 다시 100억원으로 하향조정하고 연안침식 심화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AMP 이용률 실적 저조,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 ○ 연안침식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구조물 설치 등 임시방

	편 대응이 아닌 기후변화에 따른 연안관리 방안에 대하여 장기전략 및 구체적인 계획 수립 필요 ○ 국가시행 연안정비사업의 총사업비 기준을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하향조정 되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하는 등 대안 마련 필요 ○ 포항영일만항 국제여객터미널의 CIQ 등 2단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필요 ○ 새만금신항 조기활성화를 위해 민자로 계획되어 있는 배후부지 조성에 대하여 재정전환 필요 ○ 새만금신항 수로매립을 통한 배후부지 확장 방안 검토 필요 ○ 새만금신항 신규 국가관리무역항 적기 지정과 독립된 항만 운영 계획 방안 마련 필요 ○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사원의 지속된 지적 및 부산항 북항 재개발 업무에 대한 강도 높은 자체조사를 하여야 하고, 일본의 미나토미라이 항만재개발 사업을 참고하여 성공적 사업추진 필요 ○ 평택당진항 컨테이너 야드(CY), 국도 38호선 확장 예산의 적기 확보 노력 필요 ○ 연안정비사업 시행 후 연안침식 악화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연안정비사업 타당성 심사 필요 ○ 연안재해 위험으로부터 국민 안전 제고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재해 대응의 시급성 등을 적극 고려하여 국가사업 강화 필요 ○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항만 구축 및 관련 산업 육성 필요
--	--

	○ 항만개발 및 유지관리사업을 통합하는 산하기관 설립 검토 필요 ○ 전국 항만시설의 대형시설장비의 노후화가 심각하며, 이에 대한 안전 보장방안 마련 필요 ○ 다대부두를 재개발 필요에 따라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정계획 반영에 대한 검토 필요 ○ 서귀포 강정지구 크루즈 관광객 편의성 제고 및 크루즈산업 활성화 등 지역발전 도모를 위해 항만지원시설 조성 필요 ○ 해수부 지원 기술로 선정된 기술을 활용하여 침식방지를 위한 방파제 건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검토 필요 ○ 새만금신항의 국가관리무역항 지정을 위해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전북도 등 지자체와의 협의 진행 필요 ○ 군산항 준설토 투기장 포화가 우려되는 만큼, 투기용량 추가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평택·당진항 관리부두 시설확장 필요 ○ 테트라포드·방파제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수부에서 적극적인 대책 마련 필요 ○ 해수부 부지를 활용한 전북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조성 필요 ○ 감천항의 실태를 확인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안 마련 필요 ○ 4대 항만공사가 추진하는 항만관련 개발사업 각종 문제가 노정되었는바,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관리감독
--	--

	강화를 위하여 항만개발 및 유지관리를 통합·운영할 수 있는 공공기관 설립 관련 검토 필요 ○ 국가관리 무역항의 친환경·자동화 항만으로 전환하는 등 탄소배출량을 감소시켜 우리나라 해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기 타	○ 사법부가 인용하는 해심원의 해양사고 조사, 원인규명, 행정처분 등 주요 역할의 올바른 수행 여부에 대해 확인할 필요 ○ 해심원이 조사와 책임규명, 징계 및 처벌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할 필요 ○ 최근 5년간 해양사고 심판의 계류일 수가 늘어난 원인 분석 필요 ○ 해심원의 현재 예산과 인력으로 충분하고 정확한 조사와 심판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검토 필요 ○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사건 원인분석 자문 및 추가검토 연구용역이 3개월 내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토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지에 대한 검토 필요 ○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와 국정감사 기간 중이라도 면담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 확인 필요 ○ 여수지역 주민의 해양수산 업무 편의를 위해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한 해양수산청 이전부지 검토 필요 ○ 해양수산부 소관 정부위원회의 영상회의 활용 등 대면회의 활성화 필요

	○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채용관련 서류 보존기간 등에 대한 일관된 규정 마련 필요 ○ 독도 및 울릉도 표기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 ○ 4대 항만공사에 대한 해수부의 경영평가, 고용노동부의 운영평가 등이 시너지 효과 발휘할 수 있도록 개선책 마련 필요 ○ 해수부가 실시하는 4대 항만공사 경영평가 관련 관리·감독 강화 필요
--	---

25. 해양경찰청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해양주권수호	○ 서해북방한계선(NLL)을 집단침범하는 불법 중국어선 대응 방안 마련 ○ 북 GPS 교란 대비 eLoran 등 장비 보강 및 어업인 안전관리 대책 강구 ○ 독도 수호훈련 및 해양·항공순찰 강화 등 독도 수호 의지 강화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조직적 은폐 의혹에 대한 책임 규명 및 재발 방지를 통한 해경의 책무 이행 ○ 노후 공기부양정 대체건조 및 잦은 수리에 따른 대책 마련 ○ 헬기 조종사 정원 대비 36% 부족, 처우개선 필요 ○ 대형헬기 추락 사고 조사 철저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 신안 해역 해상풍력단지 설치 관련 목포광역VTS 음영 구역 발생 방지 대책 마련 ○ VTS 관제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 필요(국 신설) ○ 새만금신항 선박교통관제(VTS) 구축 ○ 무인기 도입 시 실제 비행 성능 평가 등 기준 강화 ○ 무인헬기 운용 교육·훈련을 통한 사고방지 대책 마련
해양범죄단속	○ 해양수사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원 사기진작 및 예산·인력 확보 방안 마련 ○ 무죄 사건 관련 분석·평가 시스템 제도 보완 ○ 밍크고래 혼획빙자 불법포획 방지 필요 ○ 고소·고발 사건 관련 처리기간이 장기화되어 민원인 인권침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 마련

	○ 해양범죄 피해자 보호 기금 집행 부진, 기금운영 재검토 ○ 수사역량강화를 위한 동해청·제주청 수사심사관 증원 ○ 마약범죄 증가에 따른 직제·인력·장비 등 대책 마련 ○ 비어업인 포획채취 금지 어구 온라인 판매, 단속 강화 ○ 국경범죄 관련 전문인력 양성·국제공조 등 대안 마련
해양구조안전	○ 연안안전지킴이 확대 운영 및 사업 효율성 제고 ○ 해수욕장 폐장 후 안전관리 대책 마련 ○ 음주운항 등 해상안전 저해 행위 근절 및 법 개정 추진 ○ 낚시어선 대상 수산자원 및 해양투기 단속 철저 ○ 무인도 안전사고 사전 예방활동 강화 ○ 무등록·미수검 수상레저기구 관리·감독 강화 ○ 72정 인양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마련 ○ 선박 內 전기차 화재 진화를 위한 대응책 마련 ○ 해양재난구조대법 시행 및 민간구조세력 중요성 증가에 따른 예산 확보 ○ 구조인력 자격 및 배치 적정성 문제 ○ 중앙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 참석률 향상 방안 ○ 해상 응급구조사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적 개선 ○ 해경 선박이동 및 대피명령 발령 개선 필요 ○ 현장 지휘관 구조지휘 능력 개선 정책
장비기술	○ 중부해역 치안과 안전확보를 위한 대형헬기 도입 ○ 함정 도입 사업 관련 비위 재발 방지 대책 마련 ○ 내구연한 초과 함정에 대한 대체건조 및 노후 통신·항해장비 교체 등 신속한 조치 필요

	○ 대형헬기의 합당한 절차에 따른 도입 및 중기계획에 근거한 일괄구매 방식 도입 검토 ○ 200톤 이하 소형정에 친환경 선박(탈탄소화) 도입 검토 ○ 함정 예비부속 등재기준 마련 및 시스템 입력 등 관리 철저 ○ 부산 정비창의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 추진 ○ 해상인명구조용 장비 100% 지급 규정 준수
오염방제	○ 광역 방제지원센터 목표 비축량에 충족하는 물품 확보 ○ 노후 방제정 교체를 통한 신속한 해양오염사고 대응 ○ 친환경선박 도입 등 증가하는 해상 화학 사고 대비·대응 역량 강화 ○ 해양·항만오염 예방을 위한 단속활동 강화 ○ 장기방치·계류선박 해양오염 예방 조치
조직운영	○ 국민안전 홍보를 위한 대변인 직급 상향(총경→경무관) 필요 ○ 해양경찰병원 설립, 사전 타당성 용역 예산 확보 ○ 관사 노후화에 따른 대책 마련 ○ 순직자 대상 인터넷 추모관 관리 철저 ○ 경비함정 등에 설치된 중국산 CCTV 관련 해킹 등 보안 대책 마련 ○ 경찰 골프장 이용 관련 자체 규정 보완 및 부당 이용자 의법 조치 ○ 국제회의 등 공무 국외출장 시 정규 일정의 충실한 참석을 위한 관리 강화 필요

	○ 성비위 근절 등 공직기강 확립 방안 마련 및 징계 대상자에 대한 표창 발행 재검토 ○ 공공요금 및 제세 연례적 이전용 최소화 ○ 속초 및 제주·서귀포 대형합정 배치에 따른 전용부두 확보 방안 마련 ○ 고흥 및 제주동부 해양경찰서 신설 필요 ○ 독도·동해퇴 등 관할하는 동해청 부장 직제 신설 필요 ○ 지방관서 등 현장 인력 부족에 따른 대책 마련 ○ 순경 입직자의 고위직 비율 확대 ○ 수사국장 2년 임기 보장으로 수사 공정성 확보 ○ 여성 경찰관 고위직 비율 확대 ○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경찰관 체력 관리 필요 ○ 간부후보생 시험, 5개청 소재지로 분산 필요 ○ 해양경찰 신입교육생 교육여비 증액 등 처우 개선 ○ 자율운항선박 시대 대비한 전문 교육 강화 ○ 퇴역합정 양여 대상국 선정 관련 타 부처 의견 조회, 위원회 등 객관적 절차 마련
--	---

26. 부산항만공사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경영관리	○ 비상임이사 선임 관련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 필요 ○ 항만인근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확대추진 필요 ○ 재무건전성 확보방안 마련 필요 ○ 임원 성비 불균형에 따른 대책 강구 필요 ○ 적극적인 지역인재 양성 필요
항만운영	○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의 난개발 및 민간 특혜 의혹 관련 대책 마련 필요 ○ 선박저속운항 참여율 부진,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 ○ 부산항의 해양금융과 법률 서비스 등에 관한 개선책 마련을 통해 질적 성장 방안 마련 필요 ○ AMP 이용률 실적 저조, 대책 마련 필요 ○ 전기차 화재 대응방안 마련 필요 ○ 항만보안근로자 처우개선, 임금체계 개편방안 마련 필요 ○ 보안시설 출입에 대한 보안관리 철저 방안 마련 필요 ○ 화재예방용 전기차 충전제어장치 설치 필요 ○ 늘어나는 항만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 및 자연재해 대응 매뉴얼 수립 필요
재개발	○ 북항재개발 미분양 토지에 대한 분양계획 마련 필요

27. 인천항만공사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일반경영	○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계획 수립 마련 필요 ○ 재무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공사 임원 성비 불균형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500억원대 세금 추징 관련 상세 내용 보고 필요 ○ 적극적인 지역인재 양성 필요
항만운영	○ 전기차 화재에 대비한 대응책(진화장비, 대응훈련 등) 마련 필요 ○ 항만 안전사고 방지 대책 마련 필요 ○ 기관 포트세일즈 활동의 인력 배치 개선 필요 ○ 아암물류2단지 화물차주차장 운영 지연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인천신항 배후단지 공공개발 검토 필요

28. 여수광양항만공사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여수박람회장	○ 여수박람회장 사후활용 실무협의체 활성화 필요 ○ 여수박람회장 마스터플랜 수립 시 여수청 이전 내용 검토 필요 ○ 여수국제해양관광포럼의 차질없는 추진 필요
항만운영	○ 세풍배후단지 입주 실적 저조, 대책 마련 필요 ○ AMP 이용률 실적 저조, 대책 마련 필요 ○ 선박 저속운항 참여율 부진,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 ○ 전기차 화재 진화 장비 전무, 대응방안 마련 필요
항만보안	○ 보안 시설 출입에 대한 보안 관리 철저 필요 ○ 항만 보안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해수부가 시행한 용역 결과의 이행 조치 필요 ○ 항만시설 무단출입 관련 철저한 조사 필요
경영관리	○ 비상임이사의 업무 전문성 부족 관련 검토 필요 ○ 지역 사회공헌 활동 미흡 관련 검토 필요 ○ 적극적인 지역인재 양성 필요 ○ 재무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29. 울산항만공사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일반경영	○ 재무구조 개선 및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여성 임원 비율 제고를 위한 계획 및 대책 마련 필요 ○ 항만 인근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실행할 필요 ○ 적극적인 지역인재 양성 필요
항만운영	○ 대기질 개선을 위한 VSR 참여율과 AMP 이용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항만 자회사 보안직 노동자 처우개선 관련 용역 결과 이행 및 적극 노력 필요 ○ 녹색해운항로 정의를 바로잡아 녹색항만 구축을 위한 선제적 대응 마련 필요

30. 해양환경공단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경영관리	○ 해양수산 공공기관은 해양 인접지역 소재가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전 검토 필요 ○ 공공기관 채용 실태조사 지적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해양환경	○ 해양환경공단의 일부 선박 및 유회수기의 노후화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 ○ 해양미세플라스틱 조사업무가 지속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에 노력할 필요 ○ 일부 결함이 발생하는 국산 드론의 성능 개선 필요 ○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의 계획대비 수거물량 달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 ○ 해양보호구역 관리 모니터링 사업 예산 삼각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 ○ 해양쓰레기 수거 예산 등 지원 확대 필요 ○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및 사고발생시 신속한 방제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침몰선박 잔존유 제거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 필요 ○ 페타이어로 인한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필요

31.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경영일반	o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기관의 노력 필요
주요사업	o 과학기술 최고국과의 격차 감소 방안 마련 필요 o 논문 인용실태 관리체계 구축 필요 o 조기 종결사업의 미이행 과제 이행 대책 마련 필요 o 연구기관 선정 및 관리감독 철저 필요 o 해양경찰 R&D사업 지원 확대 필요

32. 한국수산자원공단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경영일반	○ 임원 채용 관련 접수된 서류의 미비점에 대한 개선 필요 ○ 입찰방해 등에 대한 담당자 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필요
주요사업	○ 바다숲 조성사업 효과 제고 방안 보고 필요 ○ 태풍피해로 방치된 울진해상낙시공원 철거 필요 및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 ' 27년 이후에 TAC 어종을 100%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 및 연구 필요 ○ 어선청년임대 계약 성사율 제고 및 사업규모 확대 등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33.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경영관리	○ 공단 성과급 제도가 정부지침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 필요
해양교통안전	○ 임시검사 항목에서 불필요한 항목을 축소하는 등 제도 개선 필요 ○ 검사원마다 업무 편차를 줄이기 위해 선박검사 표준화 방안 마련 필요 ○ 공단이 보유 중인 드론 중 운영실적이 저조한 일부 국산 드론의 활용도 제고 방안 필요 ○ (주)한강버스를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는 과정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34.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교육훈련	o연수원 법정교육 개설이 부산에 치우쳐 있으므로 평택항을 비롯한 수도권 항만 교육대상자들을 위해 출장교육 등을 통한 선원 관련 법정교육 실시 및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분원 설립 필요

35. 한국해양진흥공사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주요사업	○ 녹색채권 발행 및 인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해운업 탈탄소화에 기여할 필요 ○ 선박 탄소 배출량 감소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 마련 필요 ○ 중소선사 지원확대 방안 마련 필요 ○ 해운산업 디지털 전환 기반 조성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경영일반	○ 해수부 산하 기관의 임원 채용 관련 일괄된 규정 마련 필요

36.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해양과학	○ 후쿠시마 인근해역에 대해 독립적인 샘플채취 등 조사를 수행하고, 조사계획 축소/조정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 ○ 연구선 노후화로 연구현장이 위험에 노출되거나, 해양연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
경영일반	○ 서해연구소 설립 추진시 지자체 부담조건이 과중하므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할 필요 ○ 연구 확대를 위한 서해거점연구소 설립할 필요
부설 극지연구소	○ 남극기지 비정규직 근무자 처우 관련 개선 필요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 전자기기 구매, 인사 관련 사항 등 개선 필요

37. 한국어촌어항공단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주요사업	○ 친환경·스마트양식 기술교육의 예산 및 교육과정 확대 필요 ○ 어촌뉴딜 사업,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계획변경 통제방안을 마련하고,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문제 해소 필요 ○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을 위한 해양쓰레기 수거 확대 필요 ○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상지 선정 시 평가체계 개선방안 마련 필요

38.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해양생물 보존	○ 대형 해양생물 보관 인프라 부재와 수장고 포화로 인한 추가 보존 공간 마련 필요
경영관리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이행 필요 ○ 지속·반복 사용되는 연구 소모품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및 통합발주에 의한 경쟁 입찰로 예산 집행 투명성 제고 필요

39. 국립해양박물관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경영지원	○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제도 이행 필요 ○ 임원추천위원회 임원 추천 시 성별균형 인사 논의 필요 ○ 1층~2층 급경사 계단에 대한 안전성 강화 및 이동 수단 개선 필요
주요사업	○ 수장고 부족 여부에 대한 실태 파악 필요 ○ 학술행사와 관련된 보고서 내용 개선 필요

40. 국립해양과학관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관람운영	○ 태풍으로 인한 피해복구를 하여 관람객 방문 활성화를 위해 노력 필요 ○ 연간 관람객 증대를 위한 기관 차원의 노력 필요 ○ 전시예산 확보 통한 설립 취지에 맞는 전시 운영 필요
직원복지	○ 직원의 높은 이직률 원인을 파악하고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안 전	○ 태풍 등 재난상황 발생에 따른 기관의 대응 방안 마련 필요 ○ 해안가 인접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고 관리 방안 마련 필요
기관운영	○ 기관 수익사업(관람료, 주차료 등)에 대한 검토 필요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미이행에 대한 원인과 개선대책 마련 필요 ○ 임원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계획 또는 대안 마련 필요 ○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였는데 기관의 조치가 미흡하였음, 앞으로는 노동자의 권리보장에 힘써 기관이 정상화되도록 조치 필요

41. 한국항로표지기술원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운 영	- o 박물관장 등 공모직위 채용절차 검토 필요 - o 공모 직위 공개 모집 및 심사 절차 등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능력과 경력 중심의 평가가 이뤄지도록 개선할 필요

42. 한국해양조사협회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경영관리	○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기관의 노력 필요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이행 필요

43.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조직관리	○ 회장 연봉인상 사유를 검토하여 보고할 필요 ○ 여성임직원 육성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회원조합 횡령사고 발생 시 통제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 ○ 신중하게 금융지주 설립을 추진할 필요 ○ 인사추천위원회규정 재검토 필요(단독후보시 제공모) ○ 노량진수산물시장 해수공급 독점 관련 감사실시 후 결과 보고 필요 ○ 철저한 조합감사를 통해 조직개선 노력 필요 ○ 권익위 권고에 따른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규정안 개정계획을 보고할 필요 ○ 연체율이 증가하는 조합에 대한 철저한 감사 실시 필요 ○ 부족한 여성임원 선출을 통해 공평성 문제 해소 필요 ○ 사회공헌사업 추진계획 보고 필요 ○ 행장추천위원회 투명한 운영방안 마련 및 국회 보고 필요
금융	○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방지 업무에 만전을 기할 필요 ○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확대 및 가입률 제고에 노력할 필요 ○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험 운영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입률 및 손해율 개선, 손실보전준비금 적립, 미지급금 지급) ○ 상호금융 연체율, 고정이하채권 개선대책 마련 필요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자연재해로 인한 보험료 할증 문제, 어류폐사 현지조사 기준, 파고 이격보정을 보완할 필요 ○ 단위수협 여신건전성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연체율, 부동산

	공동대출, 심사역량강화) ○ ‘24년 8월 이후 공동대출 관리·심사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자료 보고 필요 ○ 상호금융 특인대출 규정개정 필요 ○ 복합점포사업 관련 종합적인 대책 마련 필요 ○ 무상지원금의 일부지역수협 편중지원 지적 및 제도정비할 필요 ○ 지역수협 예치금 이자수익에 대해 지역수협 환원할 필요
지도사업	○ 어민 안전 책임지는 어선안전조업국 노후화, 현대화 계획 마련 필요(속초,제주,태안 포함) ○ 내수면어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확대 필요 ○ 협치모델 촉진법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외국인선원 처우 개선 노력 필요 ○ 해상풍력 관련 중앙회 차원에서 어업인을 대변하여 대응할 필요 ○ 오염수 방류 관련 대책위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 ○ 회원지원자금(보조금) 제도개선 및 부실조합 경영개선에 만전을 기할 필요 ○ 내실있는 어업인일자리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할 필요 ○ 내수면 어업 경쟁력 확보 위한 수협중앙회의 적극적 역할 필요 ○ 형평성에 맞는 부실우려조합 자금지원 업무 추진 필요 ○ 수산자원 조성 및 바다환경 유지개선을 위해 인력과 예산을 증대할 필요 ○ 어선안전조업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인명사고를 방지할 필요 ○ 조업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 보고할 필요 ○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응 및 온열질환 가이드를 통해

	예방조치할 필요(외국인선원 포함) ○ 수협중앙회 차원에서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제도개선 방안(단체협약)을 마련하여 양식비용 절감에 노력할 필요 ○ 양식업 농사용전기 대책 마련 필요 ○ 외국인 송입업체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공공성 강화 필요 ○ 내수면 양식 어업인에 대해 배합사료 직불제 도입 등 지원 확대할 필요 ○ 금어기 및 금지체장 수산물 유통 근절방안 마련 필요
경제사업	○ 위판장을 통한 총알오징어 유통문제 개선 필요 ○ 군납사업 조합물량 확대, 지역안배를 통해 조합과 상생방안 마련할 필요 ○ 위판장 위생과 안전성 개선하는 제반사업 조속히 진행할 필요 ○ 바다마트 활성화를 통한 경영개선 및 어업인 판로확대에 노력할 필요 ○ 조리가 간편한 수산가공식품 개발을 통해 국내산 수산물 공급확대방안 마련 필요 ○ 학교급식 납품 클레임이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고등어 산업 관련, 지역수협(한림·모슬포)과 협업하여 상생방안 마련 필요(정부건의) ○ 내실있는 수산식품개발을 통해 수협 경쟁력 제고 및 판매실적 향상 노력 필요 ○ 민간기업 협업 및 다양한 전략을 통해 수출사업 경쟁력 확보 방안 마련 필요

【수협은행】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금 용	○ 보이스포싱 금융당국 권고 사항 철저하게 대응할 필요 ○ 공정하고 투명한 상임감사 선임에 노력할 필요 ○ 여성임직원 육성을 위한 자구책 마련 필요 ○ 신중하게 금융지주 설립 추진할 필요 ○ 인사추천위원회규정 재검토 필요(단독후보시 제공모) ○ 수산정책자금 연체율 개선대책 마련 필요 ○ 어업경영자금 대환 관련, 탄력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필요 ○ 대손보전기금 고갈 대책 마련 필요 ○ ELS피해 및 부실대출 관련자 조치계획 및 재발방지 대책 보고 필요 ○ 임직원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마련 필요 ○ 부족한 여성임원 선출을 통해 공평성 문제 해소 필요 ○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미달문제 해결 노력 필요 ○ 행추위 의사록 자료 제출 관련,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할 필요 ○ 특정인(문OO) 대출 특혜 소명 자료 보고 필요 ○ 어업인 대출 비중을 높여 해양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필요 ○ 공정한 파트타이머 채용 절차 계획을 마련할 필요 ○ 상임감사 겸직 사실관계 확인 자료 보고 필요 ○ 행장추천위원회 투명한 운영방안 마련 및 국회 보고 필요

44. 한국선급

분 야 별	감 사 실 시 내 용
경영일반	○ 공직유관단체 지정 제외 소송 제기를 했으나 패소하였고, 해당 소송제기 부적절
해양환경	○ 국제해운 환경에 ESG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선급에서 진행중인 지원사항에 대한 질의 및 친환경 선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요청 필요

Ⅲ.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총괄

기관	시정 및 처리요구 건수
농림축산식품부	193건
해양수산부	129건
농촌진흥청	44건
산림청	66건
해양경찰청	69건
기타공공기관	431건
합계	932건

1. 농림축산식품부

- 장애인 의무고용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
- 농식품부 농업 관련 국가사무 지방 이양으로 지자체 농업직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국가정보원이 추진 중인 공공기관 망분리 정책에 따른 논리적 망분리와 다중보안체계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 벼멸구, 배, 레드향, 단호박 등의 열과 피해 등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 피해에 대한 보상 인정 및 보장 범위 확대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농작물재해보험 할증·할인제도를 개선할 것
- 손해평가 조사방식 개선, 손해평가 서비스 개선, 손해평가 적정인력 운영 방안 마련 등 손해평가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
- 농가 소득 안전망 구축과 관련하여 기본 안전망으로 농산물 가격 안정제를 주축으로 하여 선택 안전망으로 수입안정보험을 추진할 것
- 수입안정보험은 수확량 검증 시스템 미도입 등 준비 미흡으로 현장 소통 등을 통해 제도를 잘 설계하여 추진할 것
- 농업경영의 불확실성 극복을 위해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확충의 일환으로 수입안정보험의 안정적 추진·정착을 검토할 것
- 무기질 비료, 농사용 전기 등 주요 농업용 기자재 및 에너지 지원이 지속되도록 노력할 것
- 농지의 영농형 태양광 활용 확대 방안 마련, 농지법 위반에 대한 단속 철저 등 농지 보전을 위해 노력할 것
- 외국인 소유 농지의 농지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점검할 것

-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 완화, 친환경농업을 위한 농지 임대 허용, 농지진흥구역 내 농자재 판매시설 설치 허용 등 농지 취득 및 이용을 원활하게 하는 방향으로 농지 관련 규제 개선을 통해 농지거래 활성화를 도모할 것
- 농지법에서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않고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산지를 농지로 인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농업인 불이익 방지 대책을 검토할 것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를 지원하는 당초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
- 공익직불제 기본계획 수립 시 농외소득 제한 기준을 현실화하고 공익직불금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
- 임대 농지에 대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등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단속 인력을 확충하고 조사방식을 개선할 것
- 정부의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 검토 시 농업계 의견이 반영되도록 산업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농사용 전기사용자의 자가용 태양광에 REC 가중치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농사용 전기요금 관련 부처 논의 시 현실적 대안인 원자력발전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할 것
-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으로 인한 지역농협의 부담 경감, 유희시간 활용 방안, 보험 문제, 법무부 사증 발급 인원 보장 요청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장기 체류 비자 발급 검토 등 농업분야 외국인력 공급 부족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할 것

- 농업 종사자 임금체불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나설 것
- 농정의 변화 등에 대한 정책 홍보 시 기존의 행정 조직이나 농정 관련 단체를 충분히 활용할 것
- 일반 국민의 농업이해도 제고를 위해 미래세대와 교사 등에 대한 교양 농업교육을 확대할 것
- 폭염으로 인한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할 것
- 영농정착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지급기간 연장, 청년농 멘토링 사업을 영농의무교육 이수시간에 포함하는 등 사업의 개선을 검토할 것
- 청년농 유형별 맞춤형 지원, 고령농 영농기반의 통합승계 지원, 창업 외 농업 취업 지원 정책 마련, 농진청과 청년농 육성체계 조정 등 청년농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
- FTA 피해 농가에 대하여 지원사업 확대, 직불금 지원 연장 검토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지역농협 비조합원 사업이용량 규제를 완화할 것
-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부모 승계농업인에 대한 증여 또는 상속 시 공제 기준 금액 상향을 검토할 것
- 농업생산비 폭등에 대한 대책으로 필수농자재 지원 예산을 마련할 것
- 섬에 거주하는 농업인에 대한 특화된 사업이나 지원방안 마련을 검토할 것
- 한국농수산대학교에서 기술 외 전반적 지식 전수가 이루어지도록 교육체계 전반 개선할 것
- 지역농림어업협력법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할 것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대상 연령 확대를 검토할 것
- 한시 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의 상시조직으로의 전

환 방안을 검토할 것

-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여성 농민에 한정하여 실시하고 있는 여성농업인 실태조사를 개선할 것
- 농촌지역 무등록 숙박시설에서의 사고 예방을 위해 농어촌민박 신고 여부 및 시설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와 사후조치를 할 것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목표액 설정기간의 연장, 기업 출연 노력의 무 부과, 법인세 혜택 상향, 기부금품법 예외적용 등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확충을 위한 제도정비를 위해 노력할 것
- 농업인행복버스 사업이 농촌왕진버스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수혜지역이 축소된 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식품사막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요건을 완화할 것
- 농촌지역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을 신속히 지정할 것
- 대한민국 김치품평회에 원산지 위반 업체에 대해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
- 제주 지역에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를 조성하여 그린바이오 산업 생태계 활성화할 것
- 가공식품 위주의 수출실적 홍보에 그치지 않고 신선농산물 수출 경쟁력을 높일 것
-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한식진흥원 홈페이지에 한식 표기법 및 조리법 오류 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시정할 것

- 한식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 수립 업무의 외주화를 지양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것
- 중국이 돌솥비빔밥을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 국가식품클러스터내에 식품테마파크(푸드파크)를 조성하여 K-푸드 발전에 기여할 것
-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연구소를 유치 및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매년 수십조 원의 농축수산물식품 무역적자에도 불구하고, 수출실적 홍보에만 매달리는 행태 개선 및 수입 농축수산물 등에 따른 농민 피해 보전대책 마련할 것
- 쌀 초과생산량 산출 방식 변경과 같이 의심받을 만한 정책변경 행위를 지양할 것
- 국가재정법상 국고채무부담행위에 해당됨에도 관련 근거 없이 시행되어 왔던 시장격리곡 매입 방식의 위법성을 해소할 것
- 쌀값 20만원 보장을 위하여 재배면적 감축, 고품질 쌀 재배, 총체벼 재배, 쌀 수출 활성화 등 실효성 있는 쌀값 안정 대책을 마련할 것
- 쌀값 20만원 유지 및 안정을 위하여 15만톤 규모의 추가 시장격리를 실시할 것
- 공공비축미 수매 물량을 조기에 배정하고 시·도 배정물량을 확대할 것
- 천원의 아침밥 사업 대상을 대학 외 보육원, 무료급식소 등으로 확대할 것
- 3인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대해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 등과 협력하여 시중 쌀 할인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

-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 및 매입 방식을 개선할 것
- 가루쌀 활성화 정책의 실적 부진 문제를 고려하여 정책의 축소 방안을 마련할 것
- 쌀 의무수입 시 쇠미·장립종 구입 등의 예산 절감 노력을 지속할 것
- 쌀값 하락 대응을 위한 쌀가공산업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해외 공급망 확보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
- 곡물자급률·열량자급률 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것
- 밀, 가루쌀 등 전략작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가루쌀 지원 사업 관련 업체 선정, 성과 평가, 제품 기준 등의 적절성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할 것
- 밀, 조사료, 논콩 등 전략작물 직불금의 단가를 상향 조정할 것
- 공공비축미 수매 시 포대벼 수매 확대 및 영세농·고령농 등에 대한 고려 방안을 마련할 것
- 2024년도 공공비축미 계획을 재수립하고 신곡을 추가 수매할 것
- 쌀 수요량 산정 방식 변경 시 양곡수급안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를 준수할 것
- 기후위기를 고려하여 쌀 생산 감축 정책이 아닌 식량안보와 자급률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쌀 가공식품인 즉석밥의 제조 원가 및 가격의 적절성에 관하여 검토할 것
- 농어촌공사 관리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공사 감리제도를 개선할 것
- 시화·화옹 간척지 벼 재배 금지 관련 대안을 마련할 것
- 새만금 농업용수 공급사업 등 새만금 농생명용지 내부개발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 과거 폐지한 쌀 소득보전직불제와 유사한 쌀 가격안정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것
- 하계조사료에 대한 생산 적기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 정부 지침에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전락작물직불 대상이 되지 못해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존재하는 바, 지침을 명확하게 할 것
- 도매법인 공공성 강화, 온라인도매시장의 법적 근거 마련, 담합 문제 해결 등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추진할 것
- 농산물 비축기지 노후화 문제를 해결할 것
-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산지 조직화 및 규모화를 추진할 것
- 가격 변동성이 큰 채소, 과일 등에 대한 계약재배를 확대할 것
- 농축산물할인지원 사업 예산을 전통시장에 확대 배정하여 다양한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선할 것
-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책을 마련할 것
- 생산·수요 등을 고려한 농업관측의 정확도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배달플랫폼 관련 농수산물 원산지 단속 및 표시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신선농산물 불투명 포장재 연도표시제 개선을 위하여 노력할 것
- 농식품 가격 관련 국가별 통계 시스템의 마련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할 것
- 온라인 유통업체 미정산 사태 관련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것
-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수시 개최 및 생산자단체 위원 참여 보장 방안을 마련할 것

- 농산물 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조치할 것
- 농산물 표준 중량 관련 상거래 질서를 점검할 것
- 법 개정을 통한 농산자조금 지원을 강화하고 지출 구조를 변경할 것
- 친환경 농산물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유통 관련 허위·과대 광고 제재를 위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 농산물 가격 하락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영양사 법적 고유업무 보장을 위하여 식생활교육사 민간자격제도 폐지 방안을 검토할 것
- 스마트APC 지원 사업 예산 삭감에 따른 행정 지원을 검토할 것
- 공공부문 원산지근로자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TRQ 및 할당관세 운영과 관련하여 소고기 관세지원액 88%를 수입 유통업자가 독식하는 등 정책효과가 낮게 나타났으므로, 이에 대한 농업분야 영향분석 및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
- TRQ 및 할당관세 적용을 통한 수입 농산물 확대는 농산물 가격 폭락 및 국내 생산기반 악화로 이어져 국민 먹거리에 대한 수입의존성을 강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농산물 관련 TRQ 및 할당관세 제도를 신중하게 운영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 농산물 관련 TRQ, 할당관세 제도에 대해 기재부 서류제출을 성실히 이행할 것
- ODA 사업예산이 매년 대폭 증가하고 있으므로, 집행과정에서 보다 책임감 있는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것

- 미래 농업기술 혁신과 생산농업의 경쟁력 확보 계획을 마련할 것
-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중앙정부와 시·도의 계획을 연계 수립하고, 업계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민-관 협의체 운영 및 스마트농업 전문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 기후변화, 노동력 부족 등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 농기계 연구개발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할 것
-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임대형 스마트팜은 시공 경험이 없는 업체 선정, 습지 위 조성 등으로 하자가 다수 발생하였으므로, 농식품부 차원의 면밀한 조사 및 감사를 실시할 것
- 제주도에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향후 예산안 편성을 검토할 것
- 친환경농업 인증 관련 해외(EU, 영국, 일본, 미국 등) 친환경인증 취소 사례와, 이를 바탕으로 한 향후 농식품부의 인증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
- 선진국 대비 산업생태계는 뒤처지고 있어 스마트농업 산업생태계 육성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
- 선진국과 벌어지는 농업과학기술 격차 감소를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할 것
- 농진청을 비롯한 농식품부 소속·산하기관 전체의 내년도 R&D 예산 내역을 파악하고, 미래 투자인 농업분야 R&D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해 장기적으로 종자관련 연구 비중을 확대하고 과제를 다양화할 것
- 친환경인증 농산물의 현장 단속 등을 위한 구체적인 인력증원 계획을 마련할 것
- 친환경인증 허위 과대 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 논리 개발 및 제

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의 주요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다음 계획 수립 시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목표를 설정할 것
- 친환경농업 활성화 대책 및 친환경인증면적 및 가구수 축소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
-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과 청년농 육성 사업의 연계가 필요하므로, 청년농에 대한 교육을 확대할 것
- 무기질 비료 지원 사업 관련 예산 반영을 검토할 것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므로, 국비 지원을 검토할 것
- 밭농업 기계화율 제고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
- 농기계 직거래 시 정보가 남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농기계 신고제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
- 불법 농약 유통의 상당수가 온라인 판매를 통하여 발생하고 있으므로, 불법 농약의 무분별한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 강화 및 조속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수확기에 빈번하게 농기계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2024년 10월 현재 2023년 통계가 나오지 않았을 정도로 관리, 운영이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강구할 것
-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대하여 스마트팜 리모델링 공모사업 등의 형태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모든 축종에 대한 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 연장을 검토할 것
- 소 근출혈 보험의 민간 도축장 가입 확대 등 보상체계를 개선하고

근출혈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

- 축산 및 가축 방역 분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원활한 도비 확보를 위해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행안부와 공조하여 검토할 것
- 용도별 차등가격제에 참여한 유업체가 낙·축협과의 계약물량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할 것
- 도축장 전기요금에 대한 할인 연장 및 농사용 전력으로 변경 방안을 마련할 것
- 축산분야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규모 유지 및 예산집행을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영세농가, 소상공인의 등급판정 계란 유통 비중을 확대할 것
- 농식품부의 미흡한 관리감독으로 인해 이력제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축산물 등급 허위 표시, 이력관리 위반 등 유통업체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한우의 경우 다른 축종에 비해 유통마진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국내산 축산물 직거래 판매장 확대를 위해 기존 사업을 개선하여 축산물직거래활성화 지원 사업을 재개할 것
- 송아지 생산안정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퇴역 경주마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계획과 메탄감축 로드맵과의 연동강화 및 메탄감축 수단별 구체적 시행계획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
- 산란계 최소사육면적 확대에 의한 산란계 농가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한우 폐사 시 가축재해보험 보상 기준 현실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축종별 육성·발전법 제정을 검토할 것
- 한돈산업의 중장기 발전 방안을 강구할 것
- 향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관련 예산을 확대할 것
- 유사산업과의 형평성 및 경마산업의 발전을 위해 온라인 발매 총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및 유럽연합, 일본에서 사양별꿀을 식품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사양별꿀을 식품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 농식품부 차원에서 검토할 것
- 마사회 본사의 경북 영천 이전을 검토할 것
- 축산분야 농업 정책자금 상환기한 연장 및 금리 인하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 동물용의약품 불법유통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
- 축산농가들이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유인책을 마련할 것
- 가축방역 인력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가축방역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수의직 공무원 공석 문제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 가축방역 관련 전문가 및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것
- 가축전염병 관련 정책 홍보의 특정 지역 편중 문제를 개선할 것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인간 전파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일시이동중지명령시 가축분뇨 부속도 검사기간 연장을 검토할 것

- 살인진드기(SFTS) 인체용 치료제 개발 및 방역 홍보를 위하여 노력할 것
- 겨울철 오리사육제한의 이유, 시행기간 및 계열화사업자의 피해 지원대책을 검토할 것
- 가축전염병 관련 타 부처와의 업무협의를 확대하고, 담당자의 직위를 격상할 것
- ASF 등 질병발생 농가의 경우에도 경감기준을 적용하여 가축평가액의 100%까지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할 것
- 5년 동안 ‘심각’ 단계를 유지 중인 ASF 관리실태 관련 위기단계 하향 조정을 검토할 것
- 렘피스킨 관리등급의 하향을 검토할 것
-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닭전염성기관지염 발생에 대하여 백신 도입 등 대응할 것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기관장 상임화를 위해 노력할 것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사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 꿀벌 응애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응애 방지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수요조사 및 시범사업 모델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것
- 영농형 태양광 활용을 위하여 이격거리 규제 완화 등 방안을 검토하고, 이격거리 규제 관련 지자체 성공사례, 해외 지원정책 등을 참고하여 정책에 반영할 것
- 태양광 사업 참여에 따른 농민들의 저조한 태양광 수입 및 금리 인

상 피해에 대한 진상을 파악할 것

- 개사육농장 폐업에 따른 잔여건을 관리할 것
- 개사육 농가의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지원체계를 개선할 것
- 개사육 전·폐업 농가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원할 것
- 동물보호단체에서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등의 관리감독을 할 것
-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 반려동물 사후 처리(동물 장묘업)를 위하여 이동형 장묘업 확대 도입 등 방안을 모색할 것
- 등록대상 동물 범위 확대를 검토할 것
- 반려동물 통계 개선을 통하여 신뢰성을 제고할 것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프라 부족 문제에 대응할 것
- 동물병원 진료항목 표준화에 노력할 것
-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를 통하여 반려인의 선택권을 강화할 것
- 동물병원 진료부 발급 의무화를 위하여 대응할 것
-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의 사회적 요구수준 반영을 통하여 내실 있는 성과를 창출할 것
- 고양이 급성질환 사고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 기질평가제 실효성 문제 및 탈락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충실히 이행하고 농식품부 내 컨트롤타워의 권한 강화를 검토할 것
-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분양과 관련하여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를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실태점검할 것

- 고위험병원체 활용을 통해 민간과 함께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노력할 것
- 검역본부 공무원 직원의 처우를 개선할 것
- 꿀벌 질병확산 사전 예방 차원에서 수입 벌집꿀에 대한 철저한 검역대책을 마련할 것
- 돼지일본뇌염백신 오염 문제와 관련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동물용 의약품 국가출하 승인 검정기준 및 동물약품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 근절되지 않는 동물용의약품 유통 실태 관련하여 온라인 플랫폼 별 각각의 특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발간할 것

2. 농촌진흥청

- 밭농업기계화율 제고 및 성과관리를 위해 노력할 것
- 기후적응형 등 품종 개발 및 실용화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 종자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종자개발을 강화하고 수출전략을 마련할 것
- 농업 분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
- R&D 예산 확보 및 인력 부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R&D 부정 집행 방지를 위한 제도를 보완할 것
- 농작물 병해충 AI 영상진단 처방 앱 서비스 품질을 개선할 것
- 사양별꿀 관련 연구를 강화하고 밀원수 식재로 생태계를 보전할 것
- 농업기상재해조기경보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할 것
- 신동진 관련 농가 수용성 등을 점검할 것
- 밀가루 대체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가루쌀 보급 정책을 재검토하고 수입밀과 경쟁할 수 있는 우수한 우리밀 품종을 개량 및 보급할 것
- 수발아율이 높은 가루쌀 품종 개선 및 농가 보급을 위해 노력할 것
- 기상, 재해, 병충해 예측정보시스템을 통합 및 개선할 것
- 쌀 생산량 예측 작물모형을 개선할 것
- 새만금 간척지의 내염성 있는 사료작물 종자개발을 검토할 것
- 제주 기후변화 대응 식량작물 연구 및 인프라를 강화할 것
- 고추 품종개량 및 기계화율을 제고할 것
- 아열대 과일 품종에 대한 투자를 증대할 것

- 식방풍 건강기능식품 개발 연구를 조속히 추진할 것
- 감귤산업 진흥을 위해 감귤 관련 연구 및 투자를 확대할 것
- 치유농업센터 구축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맞춤형 모델사업을 확대할 것
- 꿀벌 실종 대응 강화 등 꿀벌 육성방안을 마련할 것
- 농산가공품 메타버스 홍보관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할 것
- 농업관측 정확도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
- 벼멸구 피해에 신속히 대응할 것
- 토마토췌나방에 대한 대책 수립 및 보상을 검토할 것
- 검역병해충 시스템 개선 및 지역별 맞춤형 대응 전략을 마련할 것
- 일반벼 수탈아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것
- 전기 배터리 탑재 농기계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관리할 것
- 농업현장 온열질환 관련 연구개발·예방사업을 확대하고, 브로슈어를 개선(외국인용)할 것
-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교육을 강화할 것
-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지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 조례 제정을 독려할 것
- 농약 시험성적서 전산화 및 농약안전정보시스템 등록을 완료할 것
- 여성농업인의 농업기계 교육 참여율을 제고하고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개발할 것
- 신동진 공공비축매입제한 기준인 수량성평가와 관련하여 올바른 수량성 산정을 통한 공공비축매입제한 제외를 검토할 것

- 종자개발 실용화율 및 로얄티 수입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새만금 중심의 사료작물 종자생산단지 구축을 위한 예산을 마련할 것
- 우수치유농업인증제 법적 도입에 따른 사업 예산을 마련할 것
- 약용작물 스마트화를 위한 연구사업을 진행할 것
- 시비처방기준 완화 및 시비처방서 신속 발급 등 가축분뇨처리 민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병충해 연구예산 등 기후대응 R&D 예산을 복원할 것
- 검증되지 않은 유튜브 농작물 방제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 외부강의 관리,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공직기강 강화에 힘쓸 것
- 공무원 처우를 개선할 것
- 청사 개방을 검토할 것

3. 산림청

-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
- 목재자급률 향상 방안 및 산림고령화 대책을 마련할 것
- 남북산림협력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할 것
-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제 대책을 마련할 것
- 지자체별 녹지직 공무원의 확충을 위해 노력할 것
- 산림헬기 도입 시 정기 계획에 따른 일괄 구매 방식을 검토할 것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목에 대한 경제적 활용 방안을 연구할 것
- 새만금수목원의 정상 개원 및 새만금국가정원 지정을 위해 노력할 것
- 산림보전직불제를 도입할 것
- 국내산 펠릿을 사용하여 목재펠릿보일러 이용을 활성화할 것
- 목재산업규모 및 시장수요 등을 고려하여 목재등급평가사 자격제도를 운영할 것
- 직접일자리사업 성과평가 지표를 현실화하고 직업훈련과 연계를 강화할 것
- 임업직불제 지급대상자를 확대하고 자격요건을 개선할 것
- 농촌진흥청 등과 협업하여 밀원수종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할 것
- 숲가꾸기, 벌목을 이용한 생태자연도 등급조정 등을 통해 무분별한 산림훼손 및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부와 적극 협의할 것
- 1인당 도시숲 면적, 도시숲 접근성 및 연결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숲을 조성할 것

- 헬기 야간진화 시 NVG(Night Vision Goggles) 사용을 위해 관계 국가와 적극 협의할 것
- 선도산림경영단지의 단계적 후속사업을 실시하고 예산을 확보할 것
- 임도 확충과 노후화 임도의 구조 보강을 위해 노력할 것
- 사방시설 정밀점검 미실시, 안전조치 미이행, 준설편가표 미작성 등 관련 규정 미준수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 산불위험예보시스템 정확도 제고를 위해 인위적 요인 등을 포함하여 시스템을 개선할 것
- 산림사업 안전사고 응급처치 키트 보급 예산을 확보할 것
- 임업기계 종합보험제도가 실시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것
- 해안방재림 조성계획에 따른 사업 실적을 제고할 것
- 한국치산기술협회 성과급 환수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 산림산업 현장맞춤 인재양성 사업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
- 소나무재선충병 적기방제를 위해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고 지자체별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국비를 지원할 것
- 신불산 모노레일 부설 공사의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
- 보유 헬기 가동중단 및 노후화 대비를 위해 신규 헬기 도입 및 부품 수급 방안을 마련할 것
- 지자체별 산불진화헬기 임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것
- 국외 산림훼손을 통해 생산된 목재펠릿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공급망 관리를 강화할 것
- 산림사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효성 있게 실시할 것

것

- 산림사업 등 산림청 소관 사업 발주 시 공개경쟁입찰을 확대할 것
- 불법산지전용 단속인력 확대를 위해 지자체 등과 적극 협의할 것
- 보전산지 전용 허가 시 산림훼손 범위의 최소화를 위해 법규를 엄격히 적용할 것
-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고 활용 매뉴얼을 마련할 것
- 노지재배 표고버섯, 마, 더덕 등이 재해보험 품목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및 실태조사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 탄소중립 등 국가적 과제를 분담하는 개인 산주 대상의 세제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 땅밀림 위험지도 개발 시 표본 개수를 충분히 확보할 것
- 산림재난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할 것
-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교육훈련 체계를 마련할 것
- 산사태 위험 기초조사 우선지역 대상지 선정을 철저히 하고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심의를 적기에 실시할 것
- 휴양림 예약권 거래 남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할 것
- 지자체장 및 산림청 소속기관장을 대상으로 산불현장통합지휘 전문 교육을 철저히 실시할 것
- 산림복지전문가 자격증 제도의 엄격한 운영 및 자격시험의 변별력

확보를 위해 개선책을 마련할 것

- 산림청 관리지역 내 전기차 과충전 방지시설 및 리튬소화기를 확충할 것
- 기후적응 및 화재 예방 차원에서 소나무 식재 비율을 낮추고 내화수림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것
- 지역적 특징을 감안하여 국가정원 지정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납분을 조속히 징수하고, 산림훼손 면적을 고려하여 대체산림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 국내 산림 과밀화 및 수종 영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벌기령 조정을 검토할 것
- 공공기관 데이터관리시스템에 재해복구(DR)시스템을 추가할 것
- 지역주민 소득과 연계하여 밀원수 조림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
- 고성능 임업기계장비 운용인력 확대 및 장비 활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 흰개미 확산방지 및 피해방지를 위한 연구사업 및 방제대책을 마련할 것
- 숲경영체험림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청자격 요건을 완화할 것
- 덩굴류 제거를 위한 체계적인 방지책을 마련할 것
- 북한 쓰레기 풍선 남하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것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관리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산사태 사업에 대하여 전문성이 결여된 산림조합에 위탁하는 것을 지양할 것
- 공중보행시설에 대한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 임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실효적인 예산편성과 정책을 마련할 것
- 임대 신설 시 사유임 토지수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 산지전용, 토석채취허가지 재해예방 및 불법토석채취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춘 고품 팔영산권에 남부권 산림치유원을 조성할 것

4. 한국마사회

- 자회사의 일반관리비, 이윤율 상향 조정 등 자회사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한 모회사의 지원을 검토할 것
- 법인카드 쪼개기 결제, 증빙누락 등 지침에 맞지 않는 사용이 다수 발견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매출 및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부채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비상경영이 필요한 시점인 반면, 임직원 평균연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검토할 것
- 보다 적극적인 책임경영 방안을 강구할 것
- '23년도 경영평가 세부평가 항목 중 리더십 및 윤리경영에서 D등급을 받은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 불법 사설경마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불법경마 단속 인력과 예산이 감액되었으므로, 관련 예산 증액을 검토할 것
- 경주퇴역마 복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식용금지약물을 투약한 경주퇴역마가 식용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말고기 유통이력제 등 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
- 도박 중독 유병률이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 대비 높은 반면, 도박 중독 및 예방·치유 사업에 총 매출의 0.4%만 집행되고 있으므로, 중독 예방·치유 사업 예산 확대를 검토할 것
- 자율발매기 구매상한 위반 문제 관련하여 연속구매 방지장치 도입을 검토할 것
- 온라인 발매의 긍정적 효과 및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 발매 총량 확대를 검토할 것

- 로열더비와 같이 마사회 온라인 회원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는 불법단체를 확인하여 불법경마를 사전에 차단할 것
- 온라인 발매 이후 경마 중독성 및 의존도 확인을 위해 고객 구매 성향에 대한 분석을 실시할 것
- 온라인 마권사업 시스템 취약성 관련 작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대응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것
- 온라인 발매 총량이 확대될 경우 사행성이 조장될 우려가 있으므로,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선행할 것
- 경마감독위원회 개최 등 농식품부와 협의해서 불법도박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 마사회 본사의 경북 영천 이전을 검토할 것

5. 한국농어촌공사

-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액, 공사 지연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배수개선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예산 증액을 위한 조치를 할 것
- 제주 하가지구 배수개선 사업을 조속히 시행할 것
- 시공책임형 CM 도입을 검토할 것
- 저수지 등 수리시설물 노후화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
- 늪장대응, 땀질식 배수로 공사로 인한 침수 현상을 방지하고 상습농지 등에 대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것
- 농업기반시설 재해대응력 강화를 위한 재원을 확보할 것
- 안전진단 미 실시 노후저수지에 대한 조속한 안전진단을 시행하고, CSG공법 적용을 검토할 것
- 저수지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비중을 높일 것
- 기후대응 전담조직 인력을 보강할 것
- 영농환경 변화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을 강화할 것
- 시설물 무단점용을 방지하고 자산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공공목적 사용시 사용료 감면 및 면제를 검토할 것
- 저수지 수질관리를 위한 예산을 확보할 것
- 석문대호지구 용수공급 위한 양수장을 확보할 것
- 김제시, 부안군, 군산시 배수개선 설계사업을 추진할 것
- 아호배수장 부실관리로 인한 침수피해에 대한 피해보상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것

- 탐정저수장 저수율관리 부실에 따른 보상방안을 마련할 것
- 기상이변으로 인한 극한호우에 대비하여 사전방류시설 등을 확충할 것
-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 환매요율 인하를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할 것
- 농지연금 수시인출형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임대수탁 임차인 선정시 현장여건에 따른 탄력적 운영을 도모할 것
- 임대수탁 임차수수료 임차인 전가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농지이용실태에 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농지 관리체계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
- 농지은행 플랫폼의 일대일 맞춤형 원스톱서비스를 추진하고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할 것
-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지은행 제도를 개선할 것
-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의 타작물 재배 및 휴경지 간 임대료 감면 수준 차등화를 검토할 것
- 농지연금 가입률이 낮은 지역에 대한 가입 독려, 농지연금 월지급금 인상, 지역별 편차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직원대출 금리인하 및 한도초과 등 지침위반 대출에 대한 감사와 개선 조치를 강구할 것
- 대술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공익신고 관련하여 신분상 처분 등 조속히 조치할 것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여성임원 비율 20%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재해·재난을 대비하여 데이터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김제 혁신밸리 하자보수 관리 및 보상 마무리를 철저히 할 것

- 스마트팜 대규모 하자, 사업지연에 대해 자체적으로 일제 점검할 것
-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하는 등 안전관리가 미흡하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하도급 대금 미지급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 오산시와의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용수로 대체시공으로 농지감소 및 농업인피해가 우려되므로, 손익비교, 환경영향,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등에 관한 재조사를 할 것
- 발농업 관련 경지정리 계획을 수립할 것
- 농어촌공사가 수행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해 외부감리 제도를 도입할 것
- 입찰담합에 대한 소제기 기간 도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조치 및 예산상 배임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
- 정부경영평가 중 청렴도평가 및 안전관리등급평가 결과가 부진하므로 청렴도를 회복 및 안전사고 예방 방안을 마련할 것
- 고위직 인사평가에 청렴도 항목을 반영할 것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징계 제도 보완을 위한 내부 규정을 개선할 것

6.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견고추 등 수입농산물 잔류농약 초과 검출 관련 안전성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농산물 할당관세를 최소화하고 물가안정 효과를 검증할 것
- 품목별 위기단계 관리 가이드라인 기준 개선 등 기후위기 대응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할 것
- 수입쌀이 국내 쌀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수입쌀의 용도를 사료용·원조용으로 전환할 것
- 통계 농업 추진 및 선제적 시스템 구축 등 수급조절 실패에 대응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
- 비축 농산물의 폐기 물량 최소화 방안 및 농산물 폐기물 재활용 방안을 검토할 것
- 노후화된 비축기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비싼 수입산 중심의 비축사업 운영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 농산물 비축량 증대를 위한 예산을 마련할 것
- 공공 비축기지를 추가 구축하고 민간 비축기지 기준을 완화할 것
- 농산물 수입 방안 외의 농산물 가격 상승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 수입콩 운송비 지원 정책의 공정성 확보 및 대기업 혜택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국산밀 소비 활성화를 위한 학교급식, 공공급식 등 활용 대책을 마련할 것
- 배추값 폭등에 대응한 정부 비축사업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국산 밀·콩 관련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

-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관련 온라인 유통업체 미정산 사태에 대응하여 농식품업체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유통구조 개선으로 유통비용 감소와 농가수익 증대 위한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신속한 제정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
- 신선식품 수급이 어려운 식품 사막 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 공공급식통합플랫폼 이용률 제고 방안 및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업체의 부정행위 근절 방안을 마련할 것
-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신선 농식품 수출 증대를 위해 시설투자 등 실효성 있는 수출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 농식품 수출 국가 편중 문제에 대응하여 다변화 방안을 마련할 것
- 대기업에 편중된 국내 농산물 수출 지원을 지양할 것
- 수출물류비 지원 폐지에 따른 농업인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
- 쌀값 안정을 위한 쌀 해외시장 활로 개척 방안을 마련할 것
- aT센터 상사관 운영 취지에 부합하도록 농수산식품 관련 기업 입주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 정부경영평가 계량지표 감사원 지적 관련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
- 정부경영평가와 청렴도평가 등급 하락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

- 공사 사내대출 제도 및 혁신지침을 준수할 것
- 해외지사 자체감사 결과 관련 관리체계를 개선할 것
-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여 내부 인사 정책을 추진할 것
- 자회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적절한 일반관리비 비율을 유지할 것
- 온라인 유통업체 미정산 사태 관련 농식품업체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 근절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른 성과급의 등급별 차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식품외식종합자금 지원이 국산 농산물 및 식재료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 소각되는 폐농작물을 재활용하여 친환경 제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7. 축산물품질평가원

- 돼지고기 등급제도를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축산물 이력제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축산물이력제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별꽃 등급제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
- 한우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 한우의 유통과 관련하여 담합 등 부정행위가 있는지 파악하는 등 축산물 부정유통 근절을 통해 국민불신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8.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하여 비상임 기관장을 상임화 전환하도록 노력할 것
- 가축방역사 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없도록 증원 및 처우개선에 노력할 것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현장 직원의 안전사고 및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대책을 수립할 것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홈페이지 웹 접근성 인증 획득 및 재해복수 시스템(DR) 구축을 추진할 것
- 드론을 통한 축산농가 소독 시 소독제 비산에 의한 인근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
- 수입 식용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능 검사의 표본 검사 개체수를 확대할 것

9.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스마트팜 사업 관련 초기 비용 부담 완화 등 청년층 정착률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청년 창업형 후계농 지원에도 불구하고 청년 농업인 비율이 낮은 이유에 대하여 검토하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
- 농생명자원 분야의 투자가 단절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기술개발전략을 마련할 것
- 농업 위기 극복과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R&D 예산을 확대할 것
- 노지농업 생산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기술 경쟁력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 밭농업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한 추진계획을 마련할 것
- 노지농업과 식량자급이 중요하므로, 관련 추진계획을 마련할 것
- 우리 농업·농촌 현실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통해 농촌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
- 전세사기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및 이에 따른 이자비용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
- 유사 시 데이터 관리를 위해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계획을 마련할 것
- 균형 있는 인재 운영을 위해 여성 임원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10.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벼멸구, 배, 레드향, 단호박 등의 열과 피해 등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 피해에 대한 보상 인정 및 보장 범위 확대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농작물재해보험 병충해 보장을 확대할 것
-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 산정 방식 및 피해 조사방식 등 및 할인할 증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원예시설 폭염 피해 보상에 관한 약관을 개선할 것
- 농업 분야와 어업 분야의 재해보험이 차별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어업 분야 재해보험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고수온 재해를 주계약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비수도권 지역 투자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기관 명칭에 어업 관련 사업도 반영할 수 있도록 명칭 변경을 검토할 것

11. 국제식물검역인증원

- 재해 발생시 데이터 관리방법 및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계획을 마련할 것
- 경쟁입찰·수의계약 비율에 대한 현실적인 목표를 수립할 것

12.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여성농업인 영농여건개선교육 시 강사 만족도 평가 항목에 ‘정치적 중립성 평가’ 추가를 검토할 것
-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자격제도 관련 심사 세부기준표를 마련하고 안내할 것

13. 한식진흥원

- 한식의 인기가 높아짐에도 한식 홍보 예산이 감소되고 있으므로 한식홍보 예산을 확보할 것
- 한식진흥원 브로슈어 및 홈페이지 등에서 한식 표기법 및 조리법 등 오류가 발견됨에 따라, 임직원 역량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중국이 돌솥비빔밥을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하여 한식을 우리문화로 알릴 수 있는 가시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할 것
- 외국어 번역·감수인력의 상주 배치 방안을 검토할 것

14.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 국가식품클러스터 분양률 제고, 연구소 유치, 연구용역 수행, 산학연 기술지원 등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것
- 서부권 이외 지역에서도 진흥원 인프라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권력별 교류협력 지원사업 적극 확대할 것
- 한식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을 확대할 것

15. 축산환경관리원

- 동물복지축산농장 확대를 위한 점검강화, 제도개선 등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확대를 위해 농가참여 확대 및 관리강화 등 지속 노력할 것
- 기관에서 운영중인 웹사이트 관련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웹접근성 인증을 취득하고, 인증이행 여부 등 지속 점검할 것
- 유사 시 데이터 관리를 위해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등 대책을 마련할 것

16.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포도잎을 활용한 화장품 기업 사업화 지원을 검토할 것
-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접수방법 및 불필요한 갱신절차를 개선할 것
- 벤처육성 지원사업 공정성 제고를 위한 참여기업 및 보조금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 과수 질병에 강한 무병묘목 개발·보급을 추진할 것
- 자체 수입 예산 적극 편성을 통해 결산잉여금을 최소화할 것
- 전문가 활용 시 직무 관련 공무원 수당 지급을 제한할 것
- 전세보증금 사기 관련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이행에 노력할 것
- 재해복구 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할 것

17. 한국임업진흥원

- 산림일자리발전소 사업과 신규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일자리 사업을 지속하여 수행할 것
- 대체산림 조성을 위해 파라과이법인의 해외조림사업을 지속할 것
- 임산물 수출유망품목 발굴 및 해외시장 진출 성과가 미흡하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임산물 고부가가치화 및 시장 다변화 전략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할 것
- 고가시험분석장비의 낮은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임업인 관련 교육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 산양삼 채종단지 운영이 생육모니터링에 집중되고 있으므로 제 기능 및 역할 강화를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높은 난이도, 응시자격, 양성기관 부족 등 나무의사 자격시험 제도 운영상의 현안을 해소할 것
- 2025년 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R&D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할 것
- 신청사 설계업체 선정 관련 불공정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18.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학교폭력 피해학생 대상 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할 것
- 무장애나눔길 사업예산을 증액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발급을 확대하고 관련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개선할 것
- 경기도 등 인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산림복지시설을 확충할 것

19.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내 춘양목산림체험관의 철거 또는 리모델링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접근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수목원 내 전시관 표찰 및 안내판의 정확도를 제고할 것
- 해외에 조성된 한국정원에 대한 유지보수관리 계획을 재검토할 것
- 신입직원의 높은 퇴사율을 낮출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0.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 ‘동서트레일’의 전국 확대 개통을 위해 노력할 것
- 경쟁입찰계약 비율을 높이고 과도한 수의계약 비율을 낮추도록 노력할 것
- 업무용 차량운행 목적에 부합하게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고 관리할 것

21. 한국치산기술협회

- 지반공학 분야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
- 산림청 감사결과에 따라 성과급 환수, 제도개선, 관련자 징계 등 조치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
- 산사태 예방 교육사업 및 홍보사업을 강화할 것
- 사방시설에 대한 관리·점검 및 안전진단을 철저히 할 것
- 과도한 성과급 지급을 개선하고 적정 예산집행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기본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

2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가. 농협중앙회

- 임원 등 주요 보직에 남성이나 특정지역 출신자가 편중되지 않도록 성별 및 지역별 균형을 고려한 인사를 실시할 것
- 장애인 의무고용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이행을 위한 계획을 마련할 것
- 농협 계열사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조합장 특별퇴임공로금 지급 관행이 근절되도록 조치할 것
- 협치모델 촉진법 활성화를 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
- 사회공헌비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 수의계약에 대한 예외규정을 통해 농협 자회사와의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므로 이를 개선할 것
- 법률 자문비 지출이 과다하므로 지침 마련 등 절차를 정비할 것
- 도시농협과 지역농협의 상생기금 출연 확대를 위한 출연율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도시농축협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 및 지원할 것
- 조합원 수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농축협 설립인가 기준 완화 및 지역축협에 가입 가능한 농업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
- 무자격조합원의 선거참여로 인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 조합의 외부회계감사 실시 주기를 현행 4년에서 단축하는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

- 임직원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공공형 계절근로자 인신매매 피해 등 실태 파악 및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계절근로자 온열사고 예방 및 동 제도를 운영하는 적자 농협에 대한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할 것
- 농협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 시설장의 경력·급여 기준을 지도할 것
- 농신보 법인보증 갱신 시 연대보증제도 운영에 대하여 점검·개선하고 실제 농업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보증제도의 실효성 강화방안을 검토할 것
- 농업인의 금리 부담 경감, 조합원 신용회복 지원 등 농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농협네트웍스의 과도한 내부거래 비중, 과도한 공사독식, 시공사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 문제에 대하여 잘 살펴볼 것
- 농업지원사업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농업지원사업비가 인건비 등 사업관리비보다 실제 사업비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인력충원 등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및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 준법교육 실시, 조합 감사처의 기능 보강, 상임감사제 도입 확대 등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지역 농축협 금융사고 근절방안을 마련할 것
- 일정한 규모 이상 및 건설업이나 부동산업에 대해 이루어지는 조합의 공동대출 건에 대한 사전검토를 강화할 것
- 연체율이 높은 조합 관련 부실채권 매각 등 자구 노력에 대하여 철저하게 감시·지도하는 등 연체율 및 건전성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 지역농협 경제사업 부실규모 증가 문제 해결을 위해 합병 등 구조

조정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

- 국회의원 로비 창구로 활용될 우려가 높은 농정협력위원회를 해체할 것
- 농업인을 위한 농협재단 운영 및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부금을 납부할 것
- 농업 분야 실무경험이 적은 사외이사 선임은 부적절하므로 후속조치를 할 것

나. 농협경제지주

- 농협가공유통 판로확보와 민간위탁 참여 등 용역을 포함하여 군납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 지역농협 및 하나로마트 원산지 표시위반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 국산종자 판매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전략작물 육성을 위한 소비처 확대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유통구조 개선으로 식료품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데 적극 노력할 것
- 기후 데이터를 토대로 농식품부 등과 협조하여 농작물 재배 적지 관련 지도를 마련할 것
- 농협경제지주가 구매권을 독점하는 구조를 탈피하고 농협유통과 하나로유통이 통합되는 농협 유통회사의 조직개편을 검토할 것
- 하나로마트의 납품업체 갑질 행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유기질비료 및 무기질비료에 대한 정부지원이 지속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
- 농협 농축산물 판매 플랫폼의 농축산물 가격이 민간 기업보다 높은 원인에 대하여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 단위농협 적자에 따른 쌀 매입의 어려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쌀 가격 안정을 위한 실질적 쌀 소비 대책을 마련할 것
- 국가재정법상 국고채무부담행위에 해당됨에도 관련 근거 없이 시행되어 왔던 시장격리곡 매입 방식의 위법성을 해소할 것
- 구매권 이관, 자본잠식 등 유통자회사 문제를 개선할 것
- 농협유통 관련 정규직원 채용 약속을 이행하고 비정규직 차별 문제

를 해결할 것

- 농협경제지주회사 임원의 지역별 안배를 고려할 것
- 농협 쌀국수 쌀 함유량 저조 문제를 개선하고 가격 경쟁력을 강화할 것
-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에 대한 농축협 하나로마트의 참여를 확대할 것
- 계약재배를 통해 저렴하게 농산물 구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물가 안정을 위하여 노력할 것
- 농민조합원의 농협 경제사업 미참여 문제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부실화 문제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일부 지역농협의 수산물 판매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
- 전략작물직불제 추진에 따른 농협 차원의 대책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 농산물 수급불안 품목의 계약재배율 감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농협무역의 농산물 수출 역량 강화 및 비농협계통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 쌀 적정가격 유지를 위하여 재배면적 감소, 고품질 쌀 생산, 쌀가공 식품 개발, 장립종 쌀 재배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농업진흥구역·개발제한구역 내 자재판매장 설치를 허용하기 위해 노력할 것
- 이동장터 적극 지원으로 식품사막화 문제를 해소할 것
- 공동퇴비제조장 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 의무 유예 및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지역농축협 경제사업 평가기준을 농산물 판매 중심으로 변경하고

경제사업의 비중을 확대할 것

- 국내산 축산물 경쟁력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 연장을 위해 대응책을 마련할 것
- 축산업 특성을 반영한 외국인근로자 비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사료비 절감 등 한우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
- 2,255억원이 투입된 안심축산 사업 운영에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당초 목표 달성을 위해 시스템 재구축을 검토할 것
- 과도한 축사 거리 제한으로 축산농가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사료값의 조정, 암소 격리,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 한우 산업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다. 농협금융지주

- 내부 통제 강화 및 상시감시시스템 구축, 무관용 인사조치 등 금융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횡령액 환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준법감시인 제도와 관련하여 금융규제, 법률 등 경험을 가진 외부전문가를 채용하고 업무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할 것
- BIZ-IT 공동근무 센터 이전과 관련하여 타당성 검토 등 절차를 거쳐 결정할 것
- 금융취약계층 등을 고려한 투자상품 판매기준을 수립할 것
- 정책자금 부적격 대출심사를 강화할 것
-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하여 인력의 전문성 확보, 시나리오 운영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은행의 이자수익 사회 환원 및 사회공헌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 지역조합의 금고유치 확대를 위하여 지원할 것
- NH손해보험의 손해사정법인 물량 배정 기준, 손해조사비 지급기준, 조사범위 등에 대한 재검토, 손해평가 서비스 개선 등 농작물재해보험 운영을 개선할 것
- 농림축산식품 분야 벤처에 대한 투자 발굴 및 지방의 농식품 유망 벤처 발굴 등 지방투자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 농기계종합보험에 대한 농협의 보험료 지원 분담률을 상향할 것

23. 산림조합중앙회

- 산림사업법인의 산림사업 입찰경쟁 참여로 인해 산림조합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상생) 방안을 마련할 것
- 산림기술자의 경력 및 자격취득 방식에 대한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
- 산림조합의 정원 조성사업 참여에 대한 관련법 개정을 검토할 것
-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의 손실보전 및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푸른장터 및 임산물직매장의 사업수익과 유통구조의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해외자회사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및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등 관리 감독 방안을 마련할 것
- 수목장 및 묘지관리 사업 등 산림조합 장제사업의 대국민 홍보방안을 마련할 것
- 산림조합의 협치모델사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 임업관련 경력 전문 인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지역조합 연체율 제고를 위한 중앙회 중심의 TF팀 구성 및 부실채권 청산을 위한 자회사 구성 등 실효적 대책을 마련할 것
- 산림조합 간부직원 자격전형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데이터관리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할 것
- 조합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 제고 대책을 마련할 것
- 공무국외출장 관리 강화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24.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 분야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
- 출연연구기관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의 적정 예산을 확보해 사업 정상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 내수면 마rina 개발 등 관련계획 및 정부 지원계획을 별도 보고할 것
-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
- 국민건강을 위해 해양 미세플라스틱 오염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 남방큰돌고래 보호 등 해양보호생물 보전 대책을 수립할 것
- 독도 및 울릉도 표기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
- 고수온 피해 어업인에 대한 어업경영자금 상환기한 유예 및 이자감면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
- 단위수협 여신건전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 수산정책자금 부정수급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
- ‘해상풍력 친화 수산업 융합기술 개발’ 사업 연장을 검토할 것
- 중국산 단김 유통 단속과 관련하여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온라인상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MOU 이행 필요
- 수산대전 사업 대상자 선정 시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수산물 물가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

-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이 어업인 소득증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것
-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추진 시,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행사 추진중에 있어 부정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것
- 플라스틱 어상자 예산반영, 플랫폼 등 구축 하여 일괄 교체 추진할 것
- 군급식 관련 수산물 수의 계약 비율 70% 유지를 위해 군방부와 협의 추진할 것
- 노후 삼천포수협 위판장 시설 현대화 방안을 검토할 것
- 충남 서천 국제 마른김 거래소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재정적 지원에 노력할 것
-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 시 생산량 고려 등 지역 형평성 제고에 노력할 것
- 어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장비들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집행상황 철저히 관리할 것
- 고수온 피해보상 사각지대 없도록 양식보험 재개편 사항을 검토할 것
- 어선원 산업재해 예방과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대상 확대 관련 사항을 검토할 것
- 참다랑어 양식산업 활성화를 위해 양식보험 도입을 검토할 것
- 고수온 보장을 주계약 담보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것
- 어구실명제 위반 단속을 강화하여 제도 실효성을 확보할 것
- 통발어구 대상으로 실시 중인 어구보증금제를 자망·부표에도 확대 시행하고, 제도 모니터링을 추진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폐어구 집하시설 등 회수 인프라 조성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 폐어구 관리 대책 내실화를 위해 사업 점검할 것
- 「수산업법」상 어구관리제도와 연계하여 폐어구를 관리할 것
- 인증부표 교체로 발생하는 페스티로폼 부표에 대한 처리 대책을 마련할 것
- 수명이 다한 인증부표의 회수방안을 마련할 것
- 생분해성 부표 또는 환경 피해가 없는 제품을 보편화시키고 해양생태계 보전 및 어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대책을 마련할 것
- 중국 불법어업에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 한·중 어업협정 이후 양국어선의 실질적 조업불균형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
- 금어기·금지체장 위반 어획물 판매 온라인 업체를 단속할 것
- 한일어업협상을 재개할 것(국익 고려해 신중히 접근)
- 어선 임시검사 제도를 개선할 것
- 서해5도 어업인의 정기검사 비용지원 등을 검토할 것
- 중대재해처벌법 5~49인 사업장 적용 확대에 따라 재해율이 높은 어선어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등에 대한 세밀한 계획을 검토할 것
- 어업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착용이 편리한 구명조끼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 고래 혼획 저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어선청년임대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
- 어선거래시스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해상유류저장부선(삼천포수협) 관련 육상부지마련 단계부터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 지원금 기준 개선을 추진할 것
- 연근해어선의 감척 효과를 상쇄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감척 어선 활용 방안을 검토할 것
- 고수온 피해 산정 시 현실적인 피해 추산을 위해 제도를 보완할 것
- 긴급방류 제도를 개선할 것
- 현실성 있는 고수온 피해대책을 마련할 것
- 저수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양식어류를 이동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고수온에 따른 양식 굴 폐사 피해지원대책을 마련할 것
- 내수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온난화로 인해 해상 양식에 한계가 있어 육상 어류 양식 방안을 마련할 것
- 동해안권에 어항관리선을 추가 배치할 것
- 경남 남해군 미조항의 피항지 역할 수행을 위한 방파제를 조기 건설할 것
-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향화도항의 민원 조기대응 및 예산지원을 통해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
- 국가어항 신규 지정 예비 대상항(10개소)의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반영할 것
- 국가어항 지정 후 개야도항의 사업 진척을 위해 검토할 것
- 귀어인구 유입에 치중된 귀어귀촌 종합계획, 귀어인구 이주에 따른 감소대책을 마련할 것

- 농림부의 영농정착지원금처럼 해수부에도 청년 어업인에게 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마련할 것
- 어촌소멸 대응을 위해 귀어인구가 많은 전남 지역에 대한 귀어학교 추가 설립 등 귀어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전북 부안지역에 귀어학교 설립을 검토할 것
- 해녀문화유산의 보전전승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
- 어촌뉴딜300 사업 기간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철저히 할 것
-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집행실적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 ‘24년으로 일몰되는 톤세제 연장을 위해 노력할 것
- 적자 여객선 항로의 운항결손금 지원대책을 강구할 것
- 한국해운조합의 불합리한 업무관행 및 특정 용역업체와의 장기계약 특혜 의혹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선원 복지기금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것
- 평택항을 비롯한 수도권 항만 지역에서도 선원 관련 법정교육을 실시할 것
- 평택항의 친환경 선박연료 병커링을 마련할 것
- 급유선을 통한 면세유 병커링 시 정량을 주유할 것
- 부산신항만 주식회사(PNC)의 검수업체 갑질 관련 의혹을 확인하고 조치할 것
- 장기방치·계류선박의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
- 항만울타리 내 설치된 중국산 CCTV의 보안 취약 우려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

- 항만경비 노동자들에 대한 교대제 개선 등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 해상운송 전기차 화재에 대비하여 조속한 연구개발 및 대응장비 보급을 추진하고,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한-일 국제여객선 퀸비틀호(일본국적)에 대한 안전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해양수산분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원활하게 추진할 것
- 녹색해운항로법 제정 및 ‘녹색연안해운항로’ 지정을 검토할 것
- 친환경선박 보급 지원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하였던 한강버스 사업자 선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실시할 것
- 북한 GPS 교란에 대한 어업인 및 선박 피해 저감을 위해 eLoran 수신기 설치 등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 확대를 통한 바다내비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 사업의 중·장기적 예산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할 것
- 바다내비 설치율 및 활용률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의 선정 사업자가 특급 호텔 대신 생활형숙박 시설을 짓는 것에 대해 ‘사기 나 기망’ 등에 해당하는지 법률자문을 받아보고,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할 것
- 연안침식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구조물 설치 등 임시방편 대응이 아닌 기후변화에 따른 연안관리 방안에 대하여 장기전략 및 구체적인 계획 수립할 것
- 국가시행 연안정비사업의 총사업비 기준을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하향조정 되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하는 등 대안을 마련할 것

- 포항영일만항 국제여객터미널의 CIQ 등 2단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
- 새만금신항 조기활성화를 위해 민자로 계획되어 있는 배후부지 조성에 대하여 재정전환을 검토할 것
- 새만금신항 수로매립을 통한 배후부지 확장 방안을 검토할 것
- 새만금신항 신규 국가관리무역항 적기 지정과 독립된 항만 운영 계획 방안을 마련할 것
- 부산항 북항 재개발 업무에 대한 강도 높은 자체조사를 하여야 하고, 일본의 미나토미라이 항만재개발 사업을 참고하여 성공적인 사업을 추진할 것
- 평택당진항 컨테이너 야드(CY), 국도 38호선 확장 예산 적기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 연안정비사업 시행 후 연안침식 악화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연안정비사업 타당성 심사를 검토할 것
- 연안재해 위험으로부터 국민 안전 제고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재해 대응의 시급성 등을 적극 고려하여 국가사업 강화 방안을 검토할 것
-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항만 구축 및 관련 산업 육성 방안을 검토할 것
- 항만개발 및 유지관리사업을 통합하는 산하기관 설립에 대하여 검토할 것
- 전국 항만시설의 대형시설장비의 노후화가 심각하며, 이에 대한 안전 보장방안을 마련할 것
- 다대부두를 재개발 필요에 따라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정계획

획 반영에 대하여 검토할 것

- 서귀포 강정지구 크루즈 관광객 편의성 제고 및 크루즈산업 활성화 등 지역발전 도모를 위해 항만지원시설 조성에 대하여 검토하여 추진할 것
- 해수부 지원 기술로 선정된 기술을 활용하여 침식방지를 위한 방파제 건설 추진을 검토할 것
- 새만금신항의 국가관리무역항 지정을 위해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전북도 등 지자체와 협의할 것
- 군산항 준설토 투기장 포화가 우려되는 만큼, 투기용량 추가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평택·당진항 관리부두 시설확장에 대하여 검토할 것
- 테트라포드·방파제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수부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해수부 부지를 활용한 전북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조성에 대하여 검토할 것
- 감천항의 실태를 확인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할 것
- 해양수산부 소관 정부위원회 영상회의를 활용 등 대면회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채용관련 서류 보존기간 등에 대한 일관된 규정이 마련되도록 노력할 것
-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직장 내 괴롭힘 등 조직문화 실태와 관련하여 한국수산자원공단에 대한 기관감사를 실시할 것

- 수협중앙회는 특정 회사와 10년간 독점계약을 맺고 해수(바닷물)를 공급받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노량진수산물시장 10년 계약에 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할 것
- 해양수산부 산하기관들의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사례에 대하여 철저한 전수조사를 하고 처리 결과를 보고할 것
- 선박플랜트연구소가 수의계약으로 노트북을 필요 이상 과다 구입한 것으로 불 소지가 있으므로 입찰 과정상 문제에 대하여 자체 확인·점검 후, 부적정 사유 확인 시 감사원 감사를 실시할 것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할 것
- 고수온 피해산정 기준을 치어와 성어에서 중간어까지 확대 적용할 것
- 재난지원금 한도 상향 통한 피해복구지원액을 현실화할 것
- 고수온 피해 양식어가에 대한 영어자금 상환 유예 및 이자 감면 등 금융지원을 할 것
- 갯벌 안전사고 대책을 마련할 것
- 새꼬막 등 갯벌 수산물 생태계 복원을 위한 갯벌 재생사업을 추진할 것
- 국립해양과학관 관장 등 해양수산 경력 전문 인사 임명에 대해 점검할 것
- 부안 낚시 활력타운 조성을 통한 대체소득원 개발할 것
- 전북 중심의 가공시설 지원 사업 확대 및 김산업 진흥지구 지정 등을 확대할 것
- 후쿠시마 대응예산에 대한 거짓뉴스 지적 및 실효성이 있는 사업을

재검토할 것

- 일본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하여 야당 괴담으로 인해 1조 6,000억원의 혈세가 낭비되었다는 정부의 왜곡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것
- 바지락 폐사 관련 환경영향평가 실시 등을 통해 원인 규명 및 체계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
- 매년 수십조 원의 농축수산물식품 무역적자에도 불구하고, 수출실적 홍보에만 매달리는 행태 개선 및 수입 농축수산물식품 등에 따른 농민 피해 보전대책 마련할 것

25. 해양경찰청

- 서해북방한계선(NLL)을 집단 침범하는 불법 중국어선에 대해 대응 방안 마련할 것
- 북 GPS 교란에 대비하여 경비함정에 eLoran 등 장비 보강 및 어업인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할 것
- 독도 수호훈련 및 해양·항공순찰 강화 등 독도 수호의지를 강화할 것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조직적 은폐 의혹에 대한 책임 규명 및 재발 방지를 통하여 해경의 책무 이행할 것
- 노후 공기부양정 불가동 및 잦은 수리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것
- 정원 대비 36% 부족한 헬기조종사에 대하여 처우개선 등 인력확보 대책 마련할 것
- 대형헬기 추락 사고에 대해 조사를 철저히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신안 해역 해상풍력단지 설치 관련 목포광역VTS 관제범위에 음영구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VTS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국 단위’ 조직 개편을 검토할 것
- 26년 새만금신항 개항 시기에 맞춰 선박교통관제(VTS) 시스템을 구축할 것
- 무인기 도입 시 제안서 외에 실제 비행 성능 평가 등 기준을 강화하여 도입할 것
- 무인헬기 운용 교육·훈련을 통한 사고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증가하는 해양범죄 대비 수사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원 사기 진작 및 예산·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 수사 사건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 원인 분석 및 평가 시스템에 대해 제도 보완할 것
- 멩크고래 혼획 빙자 불법포획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
- 고소·고발 사건 처리기간이 장기화되어 민원인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해양범죄 피해자 보호 기금 집행 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금운영을 재검토할 것
- 수사역량강화를 위한 동해청·제주청 수사심사관을 증원할 것
- 해양 마약범죄 증가에 따른 직제·인력·장비 등 확보를 위해 적극 대응할 것
-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금지 어구 온라인 판매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것
- 국민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국경범죄 대응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공조 등 대안을 마련할 것
- 연안사고 감소를 위해 연안안전지킴이 확대 운영을 검토할 것
- 해수욕장 폐장 후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 음주운항 등 해상안전 저해 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 및 법 개정을 추진할 것
- 낚시어선 대상 수산자원 및 해양투기 단속을 철저히 할 것
- 무인도 안전사고 대비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할 것
- 무등록·미수검 수상레저기구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 72정 인양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 선박 내 전기차 화재 대비 및 진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해양재난구조대법 시행 및 민간구조세력 중요성 증가에 따른 지원 예산을 확보할 것
- 구조인력에 대하여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구조임무 수행과 관련된 근무지에 배치할 것
- 중앙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 참석률 향상 방안을 마련할 것
- 해상 응급구조사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해경 선박이동 및 대피명령 이후 조치시간 부족에 대하여 발령 전 계도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현장 지휘관 구조지휘 능력 개선 정책을 마련할 것
- 중부해역 치안과 안전확보를 위한 대형헬기를 순차적으로 도입할 것
- 함정 도입 사업 관련 비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내구연한 초과 함정에 대한 대체건조 등 신속한 조치를 통해 안전 사고 방지 및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 대형헬기에 대하여 합당한 절차에 따른 도입 및 중기계획에 근거한 일괄구매 방식 도입을 검토할 것
- 200톤 이하 소형정에 친환경 선박(탈탄소화) 도입을 검토할 것
- 함정 예비부속 등재기준 마련 및 시스템 입력 등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부산 정비창,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할 것
- 해상인명구조용 장비를 특수정(163척)에 100%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것
- 대규모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하여 광역방제지원센터의 목표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을 확보하여 비축할 것
- 노후 방제정 교체를 통한 신속한 해양오염사고 대응 태세를 갖추

것

- 친환경선박 도입 등 증가하는 해상 화학 사고 대비·대응 역량을 강화할 것
- 해양·항만오염 예방을 위한 단속활동을 강화할 것
- 장기방치·계류선박의 해양오염에 대한 예방 조치를 위해 관리 권한을 해경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국민 안전을 위해 어려운 여건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해경 활동을 제대로 홍보할 수 있도록 대변인 직급 상향(총경→경무관)을 검토할 것
- 해경에 특화된 해양경찰병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사전 타당성 용역 예산을 확보할 것
- 관사 노후화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것
- 순직자 대상 인터넷 추모관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청사 및 경비함정 등에 설치된 중국산 CCTV 관련 해킹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 대책을 마련할 것
- 경찰 골프장 이용 관련 자체 규정을 보완하고 부당 이용자를 조사하여 의법 조치할 것
- 국제회의 등 공무 국외출장 시 정규 일정의 충실한 참석을 위한 관리를 강화할 것
- 직장 내 괴롭힘, 성비위 등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할 것
- 공공요금 및 제세의 연례적 이전용 최소화를 위해 적정 규모의 공공요금 예산을 편성할 것
- 속초 및 제주·서귀포 대형함정 배치에 따른 전용부두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 고흥 및 제주동부 해양경찰서 신설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것
- 독도·동해퇴 등을 관할하는 동해청의 부장 직제 신설 필요성을 검토할 것
- 지방관서 등 현장 인력 부족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것
- 순경 입직자의 고위직 비율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 수사국장 2년 임기 보장으로 수사 공정성을 확보할 것
- 여성 경찰관 고위직 비율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경찰관 체력 관리에 노력할 것
- 간부후보생 시험 응시자의 불편이 없도록 시험장소를 5개청 소재지로 분산을 검토할 것
- 해양경찰 신입교육생 교육여비 증액 등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 자율운항선박 시대에 대비한 전문 교육 강화 필요성을 검토할 것
- 퇴역함정 양여 대상국 선정 관련 타 부처 의견 조희, 위원회 심의 등 객관적 절차를 마련할 것

26. 부산항만공사

- 항만인근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확대 추진할 것
- 재무건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
- 임원 성비 불균형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것
- 선박저속운항 참여율 저조에 따른 적극적인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 전기차 화재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 항만보안근로자 처우개선과 임금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것
- 보안시설 출입에 대한 보안관리를 철저히 할 것
- 화재예방용 전기차 충전제어장치를 설치할 것
- 늘어나는 항만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 및 자연재해 대응 매뉴얼을 수립할 것
- 북항재개발 미분양 토지에 대한 분양계획을 마련할 것
- 적극적인 지역인재 양성할 것

27. 인천항만공사

-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계획을 수립할 것
- 기관 재무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 임원 성비 불균형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것
- 500억대 세금 추징금 관련 내용을 보고할 것
-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응책(진화장비, 대응훈련 등)을 마련할 것
- 항만 안전사고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기관 포트세일즈 활동의 인력 배치를 개선할 것
- 아암물류2단지 화물차 주차장 운영 지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인천신항 배후단지 공공개발을 검토할 것
- 적극적인 지역인재 양성할 것

28. 여수광양항만공사

- 여수박람회장 사후활용 실무협의체를 활성화 필요할 것
- 여수박람회장 마스터플랜 수립 시 여수청 이전 내용을 검토할 것
- 여수국제해양관광포럼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
- 세풍배후단지 입주 실적 저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것
- AMP 이용률 실적 저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선박 저속운행 지원제도 참여율 부진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 전기차 화재 진화 장비 전무 관련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 보안 시설 출입에 대한 보안관리를 철저히 할 것
- 항만 보안 근로자 처우 개선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해수부가 시행한 용역 결과를 이행할 것
- 항만시설 무단출입 관련 철저히 조사할 것
- 비상임이사의 업무 관련 전문성 부족 대책 마련할 것
- 지역 사회공헌 활동 미흡하므로 대책 마련할 것
- 적극적인 지역인재 양성할 것
- 재무건전성 제고 대책을 마련할 것

29. 울산항만공사

- 재무구조 개선 및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할 것
- 여성 임원 비율 제고를 위한 계획 및 대책 마련할 것
- 항만 인근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적극 실행할 것
- 대기질 개선을 위해 VSR 참여율과 AMP 이용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항만 자회사 보안직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
- 녹색해운항로 정의를 바로잡아 녹색항만 구축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
- 베트남 해외물류센터 설립 추진 과정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감사원 감사를 실시할 것
- 적극적인 지역인재 양성할 것

30. 해양환경공단

-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의 계획대비 수거물량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
-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및 사고발생시 신속한 방제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침몰선박 잔존유 제거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31.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기술 최고국과의 격차 감소 방안을 마련할 것
- 논문 인용 실태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
- 조기 종결 사업의 미이행 과제에 대한 이행 대책을 마련할 것
- 연구기관 선정 및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
- 해양경찰 R&D 사업 지원 확대를 위해 국회 협력을 강화할 것

32. 한국수산자원공단

- 임원 채용 관련 접수된 서류의 미비점이 없도록 할 것
- 입찰방해 등에 대한 담당자 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바다숲 조성사업 효과 제고 방안을 보고할 것
- 태풍피해로 방치된 울진해상낙시공원 철거 필요 및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27년 이후에 TAC 어종을 100%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 연구 및 검토할 것
- 어선청년임대 계약 성사율 제고 및 사업규모 확대 등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33.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공단 성과급 제도가 정부지침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임시검사 항목에서 불필요한 항목을 축소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것
- 검사원마다 업무 편차가 적도록 선박검사 표준화 방안을 마련할 것
- 공단이 보유 중인 드론 중 운영실적이 저조한 일부 국산 드론의 활용도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주)한강버스를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는 과정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34.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수도권 교육생들을 위해 평택에 교육장 구축 등 교육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

35. 한국해양진흥공사

- 녹색채권 발행 및 인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해운업 탈탄소화에 기여할 것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
- 해운산업 디지털 전환 기반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해수부 산하 기관의 임원 채용 관련 일괄된 규정을 마련할 것

36.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후쿠시마 인근해역에 대해 독립적인 샘플채취 등 조사를 수행하고, 조사계획 축소/조정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 연구선 노후화로 인해 연구현장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연구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온누리호 대체선 건조를 조속히 추진할 것
- 서해연구소 설립 추진시 지자체 부담이 과중해 보이므로 기재부·과기부 등과 협의하여 추진할 것
- 남극기지 비정규직 근무자 처우(월동대 연차수당, 퇴직금 지연지급, 음주, 부상자 후송절차 등)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 직원들의 전자기기 구매를 위한 수의계약 진행 과정에 대해 문제가 있으므로 부적정 행위에 대해 조치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것
- ATEC 관련 책임자에 대한 징계시효 도과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타기관 인사제도 등을 참고하여 개선할 것
- KRISO 유럽센터장 선정시 전문성, 센터 운영의 연속성 등을 고려한 적절한 인사를 할 것
- KRISO 우수연구원 선정시 엄격한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연구수행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그에 따른 수산업 피해에 대한 종합검토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것
- EU, 미국 등 기술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R&D 성과물(논문, 특허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 울릉도 심해가두리 사업 관리 관련 기사에 대해 소명할 것
- 연구 확대를 위한 서해거점연구소 설립할 것

37. 한국어촌어항공단

- 친환경·스마트양식 기술교육의 예산 및 교육과정을 확대할 것
- 어촌뉴딜 사업,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계획변경 통제방안을 마련하고,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을 해소할 것
-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을 위해 해양쓰레기 수거를 확대할 것
-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상지 선정 시 평가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38. 국립해양생물자원관

- 대형 해양생물 보관 인프라 부재와 수장고 포화로 인한 추가 보존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
- 지속·반복 사용되는 연구 소모품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및 통합발주에 의한 경쟁 입찰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

39. 국립해양박물관

- 공공기관으로서 솔선수범하여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제도를 충실히 이행할 것
- 여성임원 비율 감소에 대한 방안으로 임원추천위원회 임원 추천 시 성별균형 인사를 고려하여 추천하도록 논의할 것
- 1층~2층 급경사 계단에 대하여 관람객 안전이 우려될 수 있으므로 이동 수단 개선을 고려할 것
- 수장고 부족 여부에 대한 실태파악과 관련하여 대형 유물 보관의 한계는 있으나 부족하지는 않은 상황인지에 대해 현황 보고할 것
- 학술행사와 관련된 계획 및 결과보고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사업성 여부를 잘 파악하여 추진할 것

40. 국립해양과학관

- 전시에산 확보 통한 설립 취지에 맞는 전시운영할 것

41. 한국항로표지기술원

-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전문성 있는 인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42. 한국해양조사협회

○ “해당사항 없음”

43.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여성임직원 육성을 위한 대책 마련할 것
- 회원조합 횡령사고 발생 시 통제방안을 마련할 것
- 신중하게 금융지주 설립 추진할 것
- 인사추천위원회규정 재검토할 것(단독후보시 재공모)
- 노량진수산물시장 해수공급 독점 관련 감사실시 후 결과 보고할 것
- 철저한 조합감사를 통해 조직개선에 노력할 것
- 권익위 권고에 따른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규정안 개정할 것
- 연체율이 증가하는 조합에 대한 철저한 감사 실시할 것
- 부족한 여성임원 선출을 통해 공평성 문제 해소할 것
- 사회공헌사업 확대에 노력할 것
-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방지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
-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확대 및 가입률 제고에 노력할 것
-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험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가입률 및 손해율 개선, 손실보전준비금 적립, 미지급금 지급)
- 상호금융 연체율, 고정이하 채권 개선대책 마련할 것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자연재해로 인한 보험료 할증 문제, 어류폐사 현지조사 기준, 파고 이격보정을 보완할 것
- 단위수협 여신건전성 관리 철저히 할 것(연체율, 부동산공동대출, 심사역량강

화)

- 상호금융 공동대출 관리·심사 철저히 할 것
- 상호금융 특인대출 규정 개정할 것
- 복합점포사업 관련 종합적인 대책을 세울 것
- 어민 안전 책임지는 어선안전조업국 노후화, 현대화 계획 세울 것
- 회원조합 자산건전성 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
- 내수면어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원 확대 및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 협치모델 촉진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외국인선원 처우 개선에 노력할 것
- 해상풍력 관련 중앙회 차원에서 어업인을 대변하여 대응할 것
- 오염수 방류 관련 대책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
- 회원지원자금(보조금) 제도개선 및 부실조합 경영개선에 만전을 기할 것
- 내실있는 어업인일자리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
- 형평성에 맞는 부실우려조합 자금지원 업무를 추진할 것
- 수산자원 조성 및 바다환경 유지개선을 위해 인력과 예산을 증대할 것
- 어선안전조업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인명사고를 방지할 것
- 조업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세울 것
-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응 및 온열질환 가이드를 통해 예방조치할 것(외국인선원 포함)
- 수협중앙회 차원에서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제도개선 방안

(단체협약)을 마련하여 양식비용 절감에 노력할 것

- 양식업 농사용 전기 대책을 마련할 것
- 위판장을 통한 총알오징어 유통문제를 개선할 것
- 군납사업 조합물량 확대, 지역안배를 통해 조합과 상생방안을 마련할 것
- 위판장 위생과 안전성을 개선하는 제반사업을 조속히 진행할 것
- 바다마트 활성화를 통한 경영개선 및 어업인 판로확대에 노력할 것
- 조리가 간편한 수산가공식품 개발을 통해 국내산 수산물 공급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 학교급식 납품 클레임이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회원조합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 상호금융 연체율 및 여신건전성 대책을 마련할 것
- 외국인 송입업체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공공성 강화할 것
- 고등어 산업 관련, 지역수협(한림·모슬포)과 협업하여 상생방안 마련할 것
- 내실있는 수산식품개발을 통해 수협 경쟁력 제고 및 판매실적 향상에 노력할 것
- 민간기업 협업 및 다양한 전략을 통해 수출사업 경쟁력을 키울 것
- 행장추천위원회의 투명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국회 보고할 것
- 금어기 및 금지체장 수산물 유통 근절방안을 마련할 것
- 무상지원금의 일부지역수협 편중지원 지적 및 제도정비할 것
- 지역수협 예치금 이자수익에 대해 지역수협 환원할 것

○ 내수면 양식 어업인에 대해 배합사료 직불제 도입 등 지원 확대할 것

【수협은행】

- 보이스포싱 금융당국 권고 사항 철저하게 대응할 것
- 공정하고 투명한 상임감사 선임에 노력할 것
- 여성임직원 육성을 위한 자구책 마련할 것
- 신중하게 금융지주 설립 추진할 것
- 인사추천위원회규정 재검토할 것(단독후보시 제공모)
- 수산정책자금 연체율 개선대책 마련할 것
- 어업경영자금 대환 관련, 탄력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
- 대손보전기금 고갈 대책 마련할 것
- ELS피해 및 부실대출 관련자 조치계획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임직원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마련할 것
- 부족한 여성임원 선출을 통해 공평성 문제 해소할 것
-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미달문제 해결에 노력할 것
- 어업인 대출 비중을 높여 해양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
- 공정한 파트타임어 채용 절차 계획을 마련할 것
- 은행장 추천위원회, 추천후보자 선정 방식을 개선할 것
-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방안 마련할 것
- 행장추천위원회의 투명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국회 보고할 것

44. 한국선급

- 친환경 선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
- 공직유관단체 지정 제외 소송 제기는 부적절하며 패소한 만큼 앞으로 공직유관단체로서 책임을 다할 것

IV. 일반증인 및 참고인

1. 기관별 증인

(1) 출석 증인

□ 10. 7(월) 농림축산식품부

성명	직업	신문요지	비고
오홍복	한국전력공사 기획본부장	농사용 전기요금 개편방안 관련	
이완희	NS홈쇼핑 TV상품사업본부장	농축산임산물 판매 실태 관련	
이명구	관세청 차장	TRQ 등 농축산물 수입정책 효과점검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TRQ 등 농축산물 수입정책 효과점검	

□ 10. 8(화) 해양수산부

성명	직업	신문요지	비고
주성원	쿠팡 전무	금지품목 유통에 따른 관련 법령 위반 검증 및 제도개선 요구	
이정호	KT알파쇼핑 부문장	금지품목 유통에 따른 관련 법령 위반 검증 및 제도개선 요구	
이상민	한국수력원자력 기술부사장	한빛원전 및 고창 지주식 김 한정면허 일몰 관련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	한강리버버스 관련	
박동진	이크루즈 대표	한강리버버스 관련	

□ 10. 21(월) 해양경찰청 등

성명	직업	신문요지	비고
김광희	부산광역시 미래혁신부시장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중 트램 및 오페라하우스 사업비 부담 관련	

□ 10. 24(목)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

성명	직업	신문요지	비고
권장희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연합 회 가락지회장(서울청과)	농산물 유통시장 개혁 관련	
이원석	태평양개발(중앙청과) 대표이사	농산물 유통시장 개혁 관련	
최운재	농협중앙회 기획실장	-	자진출석

□ 10. 25(금) 해양수산부 종합감사

성명	직업	신문요지	비고
강백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	국내 김 가격안정 수입 중국산 김 현행법 위반여부 관련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	한강리버버스 관련	

2. 기관별 참고인

(1) 출석 참고인

□ 10. 7(월) 농림축산식품부

성명	직업	신문요지	비고
이무진	배추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	농산물 가격 하락 관련 농촌의 현실 증언	
김한호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내용 점검	
권혁정	전국마늘생산자협회 사무총장	한국형 소득 경영안전망 관련	

□ 10. 11(금) 농촌진흥청 등

성명	직업	신문요지	비고
백정애	공공연대노동조합 농촌진흥청지부 운영위원	농촌진흥청 공무원 근로조건 관련	

□ 10. 14(월) 수협중앙회 등

성명	직업	신문요지	비고
○○○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	직장내 괴롭힘 관련 증언	

□ 10. 16(수) 산림청 등

성명	직업	신문요지	비고
신현훈	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대원	산불재난 관련 필수 업무 종사자 위험성 및 처우 개선 증언	

□ 10. 18(금) 농협중앙회 등

성명	직업	신문요지	비고
이동호	농협유통 노조위원장	농산물 유통 시장 농협 역할 관련	
문현진	농협하나로마트 비정규직 종사자	농협하나로마트 비정규직 차별 관련	

□ 10. 21(월) 해양경찰청 등

성명	직업	신문요지	비고
서종훈	여수광양항만관리노동조합 위원장	여수광양항만공사 항만보안노동자 처우 관련	

□ 10. 22(화) 한국마사회 등

성명	직업	신문요지	비고
신향식	익산시 여성농민회장	반복되는 상습침수에 대한 대책 관련	
배형택	농민	농어촌공사의 논산 부적면 아호배수장 부실관리, 늪장보수로 농가수해피해 가중, 피해보상요구	

□ 10. 24(목)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

성명	직업	신문요지	비고
백혜숙	지속가능 국민밥상포럼 대표	농산물 유통구조 혁신 대안 마련	
홍안나	경기도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처장	병충해 및 벼멸구 등 재해피해 마련 촉구	

□ 10. 25(금) 해양수산부 종합감사

성명	직업	신문요지	비고
○○○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세월호 참사 사참위 이행 권고 미이행 관련	

3. 증인 · 참고인 주요 신문요지

□ 10. 7(월) 농림축산식품부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오홍복(한국전력공사 기획본부장)>	
○농사용 전기요금 개편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 등유 등 난방효율이 전기보다 높기 때문에 전기보다는 등유 사용이 효율적인 소비라는 주장, 동의하시는지? 농사용 전기를 중장기적으로 산업용전기 정도로 인상해야 한다는 결론. 농사용 전기요금은 농업 농촌에 대한 정책적 보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지? 그러나 보고서에서는 농사용 전기를 교차보조라고 보는데 이러한 시각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해당 연구용역 보고서를 폐기하고, 농사용 전기요금 개편을 다시 추진, 그리고 농사용 전기 개편을 추진할 때 농식품부의 의견을 구해야함에도 그렇지 않았는데 이래도 되는지? 한전의 입장은? ○농사용 전기요금 개편과 관련하여 농식품부, 해수부, 산자부, 국회와 같이 협의하여 정리해 나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	○ 일부 농사용이 원가에 미달하는 부분을 표현한 것 같음 ○농사용 전기요금의 장기적 개편안에 대한 연구이고, 당장 시행 아님 ○산업부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와도 협의하여 추진하겠음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이완희(NS홈쇼핑 TV상품사업본부장)>	
o'23년 기준 NS홈쇼핑 농수산물 편성 비율은 13.8%, 농수산물 가공식품은 38.7%인데 NS홈쇼핑이 과기부에 제출한 농축산임산물 편성 비율은 60%임. 또한 NS홈쇼핑이 제출한 농수산물 방송편성 목록에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및 묶음 상품 등이 농수산물로 편성되어 있는 것에 대한 견해는? o(장관) 주무부처로서 현황에 대해 잘 파악하고 NS 홈쇼핑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함	o주무부처인 과기부와 기준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음 o(장관) 주무부처는 과기부이지만, 과기부와 협의하여 기준을 정리 하도록 하겠음
<이명구(관세청 차장)>	
o 수입업체 정보에 대해 관세청, 농식품부가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업체명을 포함한 자료를 종합 국감 전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	o 수입업체 정보는 과세 정보로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제출이 곤란함
<정정훈(기획재정부 세제실장)>	
o TRQ, 할당관세 수입 여부를 결정할 때 농식품부와 충분한 검토를 하는지? 농식품부에서 제출해야 하는 의무 서류들이 일부 누락됨	o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제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농식품부가 할 수 있는 나름의 노력의 기초로 해서 충분히 최대한의 정보를 갖고 협의 하였음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 TRQ 물량 심사하는 과정이 부실했는데, 해당 물량이 국내 농산물 가격 및 농업 기반에 영향을 주는 결정이었음. 기재부도 이에 책임이 있다고 봄	○ 농식품부와 기재부가 같이 책임이 있다고 보며, 농식품부가 위원님 지적을 반영하여 지속 보완하고 있음 ○ 일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가지 정책적 사항을 고려하여 최선을 다하겠음
<이무진(배추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대책 및 수입안정보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수입안정보험 관련 대안은? ○현장의 우려를 청취하여 설계 및 계획을 제대로 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대한 의견은?	○끝나가는 시범사업을 전제로 추진하겠다고 하여 뜬금없다는 생각임. 수입보장보험 참여 농가는 수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임. ○가격 안정시켜줄 수 있는 기본적인 제도를 촘촘히 마련 한 후 추가적으로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 필요 ○(장관) 민관학 협의체를 통해 현장의 여러 의견을 들었고, 농업인은 기대하는 의견이었음. 시범사업 시 재해보험 대비 만족도가 높았음. 농가의 수령금도 재해보험은 인단 495만원, 수입보장보험은 712만원임.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지않는 제도를 농식품부가 도입할 이유가 없음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김한호(서울대 교수)>	
o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 9개 품목을 시작으로 전국 본사업을 앞두고 있는데 이에 대해 민관학 협의체에서 정부가 잘 준비하고 있는지를 점검했는지?	o민관학 협의체에서 내년 전면적인 시행과 관련된 전제조건들을 많이 점검했으며, 지난 10년간 시범적으로 시행해 온 수입보험 관련 축적된 노하우도 살펴봤음. 모든 품목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일부 품목부터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데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
o쌀의 수급 안정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수입안정보험이 도입되면 쌀 수급 불안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o쌀 수급관리대책은 목표가격 보장 등, 사전적 수급관리와 더불어 농업인에게 예측가능한 가격선을 제시하며 정부와 함께 위험부담을 해소하는 관점에서 볼 때 수입안정보험이 지금까지 수립했던 어떤 정책보다도 수급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
o수입안정보험의 전면 시행이나 도입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o품목으로 따지면 물론 부분 도입이지만, 주산지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하다가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의미 그것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함.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o농산물 가격안정제와 수입안정보험의 병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o가격안정제도는 수급 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음.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정책적인 후퇴라고 생각하며, 수입안정보험을 통해 정부와 농업인이 함께 위험 관리를 하면서 선제적인 수급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수급 조절을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으로 생각함.
o시범사업 기간 동안 수입안정보험의 가입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이며,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o미국의 경우 수입보험과 다른 제도가 혼합적으로 운영될 때 수입보험의 가입률이 낮았으나, 보험 위주로 정책을 이끌어 가면서 수입보험의 가입이 확대되었음. 수입안정보험의 전면적인 시행과 더불어 홍보를 강화하고, 재해보험이나 채소가격 안정제도와 연계성을 빼고 수입 보험 운영에 몰두해 나가면 가입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함.
o미국은 수입보험뿐만 아니라 가격 손실보전제도(PLC), CAT 등의 제도를 통해 다층적으로 농가경영안정망을 마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가격안정제와 수입안정보험을 함께 운영하면 더 촘촘한 사회안정망을 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에 대한 생각은?	o공익직불제가 PLC 보다 효과적인 기초소득 안정망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에 재해보험이나 선제적인 수급관리 정책을 활용하면 중층적인 소득 안정망이 된다고 생각함.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권혁정(전국마늘생산자협회 사무총장)〉	
o정부 수급안정사업에 대한 농촌 현장에서 농민의 입장에서 평가를 먼저 해 주시고, 물가관리 차원에서 할당관세 정책에 대한 농민의 견해는 어떠한지 함께 답변 요청 o수입안정보험에 대해 한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o사과의 경우 미세살수장치 보급 등 사후처방의 성격이 강했으며, 마늘의 경우 재배면적을 5% 이상 줄였지만 산지마늘 가격이 예상보다 많이 오르지 않았음 o할당관세, TRQ 물량 도입 등은 수급가이드라인에 맞추어서 정책을 할 필요가 있음 o수입안정보험의 기준가격 설정 자체가 불합리함. 향후에 수입안정보험이 전면적으로 시행된다고 해서 기준가격이 높게 설계될 수 있는지가 현장의 고민임 o(장관) 수입안정보험에 대해서는 설명이나 홍보를 통해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임.

□ 10. 8(화) 해양수산부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주성원 (쿠팡)>	
o금어기 및 금지체장 전복과 대게 등이 쿠팡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음. 대책은?	o 금어기 이전에 수확이 됐는 지를 확인하고, 판매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겠음 - 사후적으로도 전담 인력을 두고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겠음
<이정호 (KT알파쇼핑)>	
oKT알파쇼핑에서 외투장이 15cm 이하인 살오징어가 판매되고 있는데 알고 있는 지?	o 알고 있음
o기후위기와 남획, 무분별한 유통으로 국내산 수산자원 감소로 어민들의 생계가 어려운데 책임감을 느끼는 지?	o홈쇼핑 사업 총괄 책임자로서 깊이 사과드림
<이상민 (한국수력원자력 기술부사장)>	
o고창 지주식 김 한정면허가 일몰되어 소멸되었음, 다만 양식산업 발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김 양식어장이 협동양식업으로 면허된다면 한정어업 개발에 동의하기로 약속하였음.	o 관련 법 규정이 개정되면 개정 취지에 따라서 적극 시행토록 하겠음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	
○ 자본잠식 상태인 이크루즈사를 사업자로 선정한 사유 ○ 해수부 공모사업에서 이크루즈사와 협약한 다음 합작회사로 바꾼 사유	○ 한강에서 유선업을 30년 동안 해왔던 전문기업으로 전문성을 높게 판단하였음 ○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합작회사로 추진
<박동진 (이크루즈 대표)>	
○ 해수부 공모사업에서 이크루즈사와 협약한 다음 합작회사로 바꾼 사유	○ 대중교통이라는 특성상 합작 법인이 낫다는 판단으로 했음

□ 10. 11(금) 농촌진흥청 등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백정애 (공공연대노동조합 농촌진흥청지부 운영위원)>	
o우리 노동자들 현실을 말씀해 주 시기 바람	o국가 공무원 대부분은 실수령액이 180에서 190만 원에 해당하는 저 임금을 받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공무직에 비해 임금과 복리후생은 50에서 60% 수준으로 열악함. o공무직 상용인건비 불용액을 공무직 처우개선으로 사용하라고 요구했지만 변한 게 없음. 농진청에서 제출한 25년 예산 중 환경미화원 위험수당을 기획재정부에서 삭감했다고 들었음. o국회 차원에서 국가 공무원 처우개 선을 위해 적극 나서 주시길 바람.

□ 10. 16(수) 산림청 등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신현훈(동부지방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 산불재난특수진화대)>	
o산불 진화 시 지휘체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o특수진화대원 간 상황을 이해하고 전달하는 통로를 공무원이 하고 있으나, 담당자 인사발령 때마다 새로 전달체계를 만들어야 함
o젊은 진화대원의 잦은 퇴사의 문제가 무엇인지	o특수진화대 운영권자 성향에 따라 집중 업무가 달라지는 등 소모품 취급되는 게 싫어 현장을 떠나는 걸로 알고 있음
o지방청과 관리소별 분산된 운영 사항에 대하여 통합적 관리·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인지	o맞음
o특수진화대 대상 설문조사 결과, 신규채용자 교육을 대부분 선배나 동료를 통해 받는다고 했는데 사실인지	o신규 입소자 교육이 2016년 100명, 2022년 90명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굉장히 적음. 젊은 직원들은 산불진화 현장에 투입하면서 선배들한테 직무능력을 배우고 있음
o교육훈련 시 시스템이나 매뉴얼이 필요하며, 그간 교육내용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며 처우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o수당 차별을 없애야 하며, 가족수당, 출장여비, 위험수당 등을 지급해주시고 관련 예산 확보가 필요함

□ 10. 18(금) 농협중앙회 등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이동호(농협유통 노조위원장)>	
○올해 농협유통에 무슨 문제가 있었고 왜 그런지?	○3년 전에 경제지주에서 일방적으로 사업구조 개편을 하였고, 지난 2년간 대규모 적자를 겪었음. 아무런 대책 없이 통합을 밀어붙여서 라고 생각함
○농협유통 구조가 망가지면 국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생기는지?	○경쟁력 없는 하나로마트를 이용하지 않아 농민들의 농산물 판로가 줄고 소비자들은 비싼 비용을 지불할 것
○급격한 농산물 가격 변동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지?	○농산물 자체 특성과 대형유통업체에 주도권이 넘어가 그렇다고 생각함
○농협유통의 농산물 공급체계가 농산물 유통구조를 최소화하겠다는 설립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것 같음.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업을 각자 영위하다보니 별도의 수수료나 마진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유통구조가 다시 하나 생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문현진(하나로마트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과 무기계약직간의 차이는?	○무기계약직은 법적으로 근무 기간에 제한이 없으나 단기계약직과 동일한 임금 복지의 적용을 받고 있음. 또한 중식비, 교통보조비를 받지 못하며 창립기념상여금도 정규직과 다름

□ 10. 21(월) 해양경찰청 등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서종훈 (여수광양항만관리노동조합 위원장)>	
○ 항만 보안 노동자들의 현실은? ○ 항만 보안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실시한 해수부 용역 결과 대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가?	○ 자회사 용역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임금체계에 대한 근로자와의 협의가 없었으며 보전수당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음 ○ 해수부에서 진행한 경비 일원화 용역 결과가 나왔지만 4개 항만 공사 모두 보고서 결과대로 처우 개선을 해주고 있지 않음 ○ 항만 보안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수 경비원보다는 적극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한 청원경찰로의 전환이 시급함 ○ 본격적으로 협의가 진행된 건 없음
<김광희 (부산광역시 미래혁신부시장)>	
○북항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건축물 용도, 세부비율 변경 등 절차상 문제가 있는건 아닌지	○현행법상 주거용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되며, 업무시설은 지구단위계획 상 허용되는 용도임. 허가 전 관련 기관과 협의시 이견 없었음

□ 10. 22(화) 한국마사회 등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신향식(익산시 여성농민회장) >	
o집중호우시 반복되는 침수피해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o익산 망성면 시설하우스 100여동이 침수되는 등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음
o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었는데 개선이나 변화된 것이 있는지?	o배수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으나 답변이 없었음
<배형택(농민) >	
o농어촌공사에 하고 싶은 발언	o작년 논산지역에 펌프 미가동에 따른 피해가 있었고, 올해는 사업비가 책정되었음에도 신속하게 추진하지 않아 더 큰 물난리 발생함

□ 10. 24(목)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권장희(서울청과 대표)>	
○도매법인이 사실상 독과점적 지위를 통해 이익을 보고 있고 그것을 모 법인에 배당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지? ○배당을 적정 검토 및 농민과 농업에 다시 재투자돼서 환원될 수 있는 구조로 자율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	○이용률 증가에 따라 전체적인 영업이익률은 늘어나고 있으며, 출하자 등에 지원을 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 ○잘 알겠음
<이원석(중앙청과 대표)>	
○중앙청과는 과도한 배당 성향을 정상적으로 축소하고 생산자인 농민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소비자의 편익을 늘리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의견은	○위원장님 말씀에 유념토록 하고 그렇게 지키도록 하겠음
<최운재 (농협중앙회 기획실장)>	
○지난 10월 23일 이사회 안건에 농협법 개정동향으로 회장연임 허용, 연임제 보완 후속조치 등이 명시되어있는데 맞는지?	○맞음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o이러한 내용이 안건이 된 배경은?	o이사회 일부 의원의 농협법 개정 보고 요청, 농정협력위원회 제안 및 조합장들 요구가 있었음
o이사회 안건은 17일 작성, 국감에서 연임의사 없음 발언은 18일인데 위증아닌지?	o(농협중앙회장) 아직 고민해본적 없다고 말했고 이는 사실이므로 위증아님
o농정협력위원회 구성 전무 전결이 맞는지? 참가비가 인당 100만원에 3회 개최로 57백만원 소요. 임의 조직을 이용해 연임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o임의 조직이 아니고 내부규정에 의한 조직이며, 농협, 농업·농촌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함. 농협법 개정 동향 보고 시 연임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되었고, 아직 생각해본 적 없음
〈백혜숙(지속가능 국민밥상포럼대표)〉	
o유통구조 개선방안 관련 일부 도매법인만 이익을 본다는 의견에 대한 참고인의 생각과 실질적인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o유통단계를 줄이는 경쟁체제 및 공공성·투명성 강화 필요 o공영도매시장이 생산자와 소비자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공익형 시장도매인 도입 필요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홍안나(경기도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처장)>	
o참고인께서는 외래 검역해충인 토마토 빨나방에 관심이 많으신데 현재 상황은 어떠한지? o현장에서 농민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o 작년 또는 22년부터 피해가 발생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음. o 1년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 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하지 않고 대응을 미뤘던 것이 피해를 확산시킨 주원인이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빨나방 피해도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보상해야 함. 농진청의 R&D 예산을 확충해서 연구인력과 지원을 늘려주면 좋겠음. 병해충이 농어업대책법상 정의에 반드시 들어가야함. 재해보험에 친환경 특약조항이 신설되어야 함

□ 10. 25(금) 해양수산부 종합감사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 강백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	
○ 중국산 단김이 수입·유통 되었는데 식약처가 제대로 검사하지 못한 것 아닌지? ○ 안전성 측면에서 먹어도 문제가 없나요? ○ 수입 업체에 대한 처분과 제품 회수는?	○ 종자에 대한 관리가 좀 미흡했음 ○ 일본과 중국은 먹는 것으로 파악되고,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우려하실 부분이 안 됨 ○ 중국산 김이 혼입된 증거가 있을 때는 처분할 예정임
<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	
○ 한강버스에서 은성중공업과 가덕중공업 2척, 6척 결정할때 나라장터 공고 냈었는지? ○ 은성중공업과 가덕중공업이 입찰 참가 제출 서류를 미제출된 상태에서 낙찰업체로 선정	○ 서울시는 관여한 바 없음 ○ 서울시는 관여한 바 없음
<전태호 (세월호참사 일반인 유가족협의회 위원장)>	
○세월호 참사에 따른 배보상과 관련하여 계속 중인 분쟁 상황은?	○세월호지원법에 따른 배보상심의위의 배보상 결정에 동의했던 가족들과 국가배상청구한 가족들에게 인정된 위자료가 큰 차이를 보이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 진행 중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o현재 희생자 가족들이 주장하는 해결책은 무엇인지?	o문재인 정부 때 배보상 결정을 직 권취소하고, 재심의한 전례에 따 라 직권재심의를 통해 차별 시정
o해수부, 배보상심의위원회와 이 건과 관련하여 협의한 내용은?	o사회적참사조사위원회에서 직권재 심의를 적극 검토하라는 권고가 있었고, 이에 따라 직권재심의를 해수부에 신청(' 21.12)하였으며, 해수부는 국가배상청구사건 2심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답변
o직권재심의에 대해 전향적 협상을 통한 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o배보상심의위와 법원 판결 배상금 간의 차액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 되나,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따라 검토 여부 판단 가능